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북한의 핵무장을
사회운동이 용인할 수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다극체제가
국제질서의 대안인가?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 북한의 핵무장을 사회운동이 용인할 수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다극체제가 국제질서의 대안인가?

발행 2023.10.31.

펴낸곳 사회진보연대
전화 02-778-4001~2
팩스 02-778-4006
홈페이지 www.pssp.org
메일 pssp4001@gmail.com

소책자를 펴내며 ····· 8
소책자 전체 요약문 ····· 16

1부 | 북한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01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위협 때문인가요?** ····· 23
• 누가 탈냉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했습니까? ····· 26
• 핵은 국체이며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북한 정권 ····· 42
• 미국의 핵 패권에 핵무장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대안입니까? ····· 55
•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핵무기입니까? ····· 61

02 **북한 체제 자체에는 진보적인 면도 있지 않나요?** ····· 64
•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 66
• 핵 개발과 인민의 식량권, 건강권 중에 무엇이 중합니까? ····· 78
•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어려운 북한의 경제 발전 ····· 81
•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으로 가는 국가가 진보적입니까? ····· 86

2부 | NL의 국제정세 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03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인가요?** ····· 95

- 푸틴은 왜 지금 침공을 감행했을까요? ····· 97
- 우크라이나 민중의 항전이야말로 자주를 위한 민족해방투쟁 ····· 99
- 미국이 돕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이 의미 없습니까? 102

04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일까요?** ···· 107

- 모든 국가의 평등-자유를 명시한 전후 국제질서가 러시아, 중국의 대국중심질서보다 인류의 실리입니다 ····· 108
-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평화와 자유가 인류의 이익입니다 ····· 110
- 러시아, 중국의 행태를 묵과하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 114
-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을 반대해야 합니다 ····· 115

05 **미국이 신냉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117
• 권위주의와 민족주의를 강화한 중국과 러시아 ····· 118
• 왜 미국은 중국과 공급사슬을 분리할까요? ····· 123
• 미국 반대를 무조건 옹호하는 사고 틀에서 벗어날 필요 ····· 126

06 **대만 위기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일까요?** ····· 128
•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대만 문제 부상 ····· 128
• 내정간섭이 아니라 대만 시민의 권리 ····· 132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해야 합니다 ····· 135

07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극체제가 국제질서의 대안일까요?** ··· 138
•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감시? ····· 140
• 제3세계의 빚의 덫과 적자로 귀결된 "일대일로" ····· 142
• 국제사회가 중국의 강제노동수용소를 묵과할 수 있을까요? ····· 144
• 마피아 관례와 '전통적 가치'에 의존하는 러시아 권위주의 ····· 147
• 권위주의에 맞서는 세계 민중의 저항에 함께 합시다 ····· 149

소책자를 마치며 ····· 155

소책자를 펴내며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생각이 갈리더라도, '변화의 시대'라는 것만큼은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짧게 보아도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길게 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며 탄생한 '전후(戰後) 세계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격변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타격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는 미미했고, 각국은 자국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급급하거나 원조를 체제홍보와 경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역사 속의 일로 치부되던 전면적인 침략전쟁과 무력에 의한 영토 확장 시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침략에 나선 것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였고,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UN총회 결의안에 기권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전쟁의 재발을 막고 국제 안보를 보장한다는 UN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반도는 특히 잠재적인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2022년 북한 당국은 남한 공격을 염두에 둔 핵무기 개발 노선과 핵 교리를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전 세계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다음 전쟁'이 될 가능성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여파는 즉시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할 것이며, 이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급변사태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전후(戰後) 세계질서의 위기가 한반도 민중에게 의미하는 바를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가까운 나라끼리 상시적으로 전쟁을 벌이거나, 지역 내 강대국이 주변국들을 통합하거나 복속시키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구 열강과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식민지 확보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조선과 같은 약소국 민중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5년 세계대전 종료 이후 성립한 세계질서는 명목상으로 모든 민족국가의 주권과 평등을 명시하였고, 강대국들의 무력행사를 공동으로 통제하는 집단안보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득이라거나 보편적 진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현재보다 더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진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하는 질서란, 현대 이전의 지역 강대국 중심 질서로의 복귀입니다. 그 실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일대일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고대사를 현실 정치에 소환하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고대 러시아 땅으로 항상 러시아 민족의 일부였다"며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7년 미중정상회담 당시 "한반도는 실제로 중국의 일부이곤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위기, 대만 위기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고, '신(新)애치슨 라인'에 한국이 과연 포함될지 아닐지가 곳곳에서 논의됩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한 탓에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 망국의 교훈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는 주문도 많습니다.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사회운동이 국제정세를 방관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고, 누구보다 적확한 인식으로 상황을 주도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운동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전 세계 핵무력 반대'라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조차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NL(민족해방파, 자주파, 자민통) 강경파의 태도는 문제입니다. 이들의 강경한 입장은 사회운동이 일관된 반핵평화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2023년 5월 12일 "전국민중행동은 민중운동 공동투쟁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상실했다" 성명에서, 전국민중행동이 일부 NL 활동가들의 반대로 '북한의 선제적 핵공격 법령화 반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무력 반대' 수준의 입장조차 채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입장으로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통일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이른바 NL그룹들의 전문분야,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NL은 과거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논쟁 당시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민족 모순'(분단)과 미국에 대한 종속이며 사회운동의 핵심 기치는 '반미'(反美), '통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사회성격논쟁은 한국 사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혁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사회운동 내 대토론이었습니다. '사회구성체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들 중에는 북한을 분단 해소와 한반도혁명의 '민주기지'로 여기며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수용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와 한반도 분단과 전쟁 위기라는 현실은 많은 대학생, 노동자가 NL이 호소하는 '반미반일'과 '조국통일'을 수용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당시부터 NL노선은 김일성 1인 독재와 경제 실패, 비과학적 '주체사상'에 빠진 북한 체제에 무비판적이라는 문제가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NL 혁명론은 남한 민중을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혁명의 주체로 설정하지 않고 북한의 대남노선에 종속시켜, 남한 사회운동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 옹호는 사회운동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세계적인 냉전 종식의 흐름에서 북한은 여타 현실 사회주의 국가처럼 개혁·개방에 나서는 대신 고립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의 권력세습, 핵무장, 인권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NL은 이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거나, 도리어 이를 문제삼는 것은 '군부독재, 국가보안법의 잔재', '주류 언론의 곡해'라며 북한의 권력세습, 핵무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운동은 대중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협소해졌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무비판적인 입장은 민주노동당 분열도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당권파이기도 했던 NL 주류는 북

한 핵실험 규탄 성명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또 NL 주류는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정치 동향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정보를 누설한 '일심회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제명 및 북한 당국에 대한 엄중한 항의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당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권파만의 주장을 담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을 무리하게 부각시키려다 당내 반발 및 분열을 자초하고, 결과적으로 대선 참패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아프간 탈레반이 한국 사회운동의 동지입니까?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 정치활동이 보장된 미얀마에서는 군부도 할 수 있다. 모든 군사적 항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악이라고 보는 것은 집단적 광기이며 내정간섭이다.

- "유일상 교수의 미얀마 사태 바로보기 4탄", 유일상 건국대 명예교수, 《민플러스》, 2021년 3월 4일

아프간 민중들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중략) 이와 같은 (인권) 문제들은 아프간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 인권 탄압을 우려해 훈수를 두거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 "아프간의 최근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안광획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민플러스》, 2021년 8월 25일

검증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해 세간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북

녘 사회의 전반적인 기풍을 혁신하고, 무엇보다 군사외교적인 면에서 5년 여의 집중적인 (핵)개발과 대결을 통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현재 사회주의 강국 건설, 비핵화와 국제평화 선도, 대등하고 평화적인 북미관계 지향을 내세우고 있다.

- 2018년 민주노총 소책자 『평양, 모른다고 하면 안되갔구나~: 2018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

심지어 NL 강경파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NL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민플러스》는 "반(反)서방제국주의를 주도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정당하며, 이를 한국 사회가 한국의 군부 쿠데타와 같은 결로 혼동하고 반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실었습니다. 탈레반은 반서방 민족해방 자주투쟁의 모범이고, 아프가니스탄 인권 문제는 내정(內政)이므로 외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물론 국제 사회와 한국 시민의 상식이나 그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만들어 온 연대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보, 좌파의 가치로 여겨지는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관점에서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정세인식, 즉 '미국 패권의 위기와 반서방연대의 부상을 통해 다극화로 나아가는 세계'라는 틀 안에서는, 미얀마 군부, 아프간 탈레반뿐만 아니라 중국 시진핑 정권, 러시아 푸틴 정권, 이란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 등이 모두 인류를 더 평등한 다극화 세계로 인도할 긍정적 세력으로 제시됩니다.

양경수 집행부가 등장한 뒤, NL 강경파의 정세인식은 민주노총

사업 전반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이들의 정세인식을 '120만'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정책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반전평화통일' 운동을 한다며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시시각각 실체적 위협으로 떠오르는 북한의 핵 위협 동향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념과 단호히 단절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는 NL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분단체제'의 틀에서 파악하는 인식론이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과오를 직시하기 어려워하거나,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낫다'고 방어하는 태도는 일부 사회운동도 공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길로 계속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은 '미국 패권에 대한 반대'와 '일극이 아닌 다극 주도의 세계',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과 같이 진보세력 일반이 긍정하기 쉬운, 일견 아름다운 전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들을 대안으로 호명하는 길이며 북한의 핵무장과 세습정권을 옹호하는 길입니다. 사회운동이 대중의 지지와 명예를 잃을 것이 확실시되는 길이며, 세계 곳곳에 더 많은 혼란과 폭력을 불러오는 데에 일조할 길입니다.

이 소책자는 사회운동에 몸담은 활동가 혹은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 한반도·국제정세에 관해 할 법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7문 7답'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먼저 <1부 북한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북한의 핵무장, 인권위기, 권력세습 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다룹니다. 사회운동의 통상적인 태도, 즉 북한의 핵무장과 모든 군사행위를 '미국의 책임'으로 두고 면죄부를 주는 논리나 북한의 인권위기를 부정하고 3대 권력세습을 옹호하는 모습과 거리를 두고, 북한 체제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비판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적합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부 NL의 국제정세 인식,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최근 국제정세의 화두인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갈등, 대만 위기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며, 북한 정권의 이해관계를 수용한 NL 강경파의 국제정세 인식이 우리 사회운동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NL 강경파를 비롯하여 일부 사회운동 세력이 응원하는 "중국과 러시아가(그리고 북한이) 주도하는 다극 세계로의 전환"이 결코 노동자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살피고, 사회운동은 오히려 시진핑 정권, 푸틴 정권에 맞서 싸우는 중국, 홍콩, 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중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민중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이들이 과거의 관념과 단호히 단절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소책자가 그러한 토론을 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사회진보연대

소책자 전체 요약문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위협 때문인가요?

북한이 핵무장에 나서게 된 책임은 미국의 대북위협에 있다는 NL 주류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역사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가 탈냉전과 핵군축,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 한반도에서도 남한 내 미국 핵무기 철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적인 탈냉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반도 1차·2차 핵위기, 6자회담 등 실제 비핵화 협상에서도 북한은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겼으며 북미합의의 파기에 앞서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공화국의 국체"라고 부를 만큼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를 드러내며, 대남용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선제핵공격을 합법화하는 핵무력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당국이 밝히는 대남'통일전쟁' 계획, 즉 전술핵을 남한의 주요 군사거점에 투하하고, 전략핵 사용 위협을 통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시나리오와 일치합니다.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민플러스》 등 NL 주류는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국방력,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로 긍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는 강대국들의 핵 독점 체제일 따름이며 북한의 핵무장이 이에 균열을 냈다고

서술하지만, 대부분 비핵국가와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NPT 평가회의, 비핵지대조약, TPNW(핵무기금지조약) 등 비핵평화의 수단을 통해 강대국들의 핵 패권 해체와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비핵평화의 길을 택하는 대신 핵무장을 선택한 북한의 행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비핵화 대화의 조건으로 들었던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의미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최근 북한 당국의 태도는 결국 핵무장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영구적인 정권 안전보장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북한 체제에는 진보적인 면도 있지 않나요?

북한의 핵무장, 인권탄압, '3대 세습'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라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진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은 여러 교차검증을 통해 심각한 위기가 실존한다고 밝혀진 문제로, 사회운동은 북한인권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방어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인류가 보편적인 합의를 추구해 온 인권을 개별 국가가 침해한다면 국제사회와 사회운동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자유 대신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인권 담론을 내세우지만, 자유 없이는 평등도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인권위기는 '혁명 수호'를 명분으로 '혁명적 폭력'을 정당화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결함에서 비롯하였으며, 북한 세습정권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 민중을 통제하고 핵무장을 고도화하여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과정에서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즉결처형·공개처형과 같은 극단적 인권위기가 오늘날에도 계속되며, 북한 민중의 식량권·건강권도 위태롭습니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등은 남북통일경제를 한반도 노동자민중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혈통승계를 정당화하는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통해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딸 김주애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동시에 공개하며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권력세습과 이를 보증할 핵무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민족'(우리민족 제일주의) 담론보다는 남한과 구별되는 북한의 특수성, 즉 '우리국가(북한) 제일주의', '김일성 민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인가요?

여전히 북한 정권을 한반도 '민족해방'과 변혁의 지도세력으로 바라보는 NL 주류는 현재 국제정세의 주요 지점인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적 경쟁, 대만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도 북한 정권의 입장을 따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유도한 대리전으로, 우크라이나 민중을 미국 대신 전쟁을 수행할 따름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권이 장기통치를 위해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되었고, UN 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들

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침략입니다. 러시아군의 침략과 폭력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은 정당합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해서, 침략과 그에 맞선 항전이라는 이 전쟁의 기본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일까요?

NL 주류 세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감을 사서 국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마치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일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지키는 것이 UN의 원칙이므로, 침략을 당한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일이며 한반도의 미래와 연관이 깊으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한 '오지랖'이나 미국의 압박에 의한 '굴욕외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하여 크든 작든 모든 국가의 평등과 자유를 명시한 전후 세계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국, 러시아의 대국중심질서보다 인류의 실리에 부합합니다.

미국이 신냉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민플러스》 등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공급사슬 디커플링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냉전을 조장한다고 주장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위협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는 사실이지만, 중국경제는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그 대신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공격적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위기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대만 위기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일까요?

대만 위기는 중국공산당이 권위주의적 통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대만 통일'을 제기하면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민주화 운동 진압 등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목도한 대만 시민들의 '통일 반대'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는 '내정간섭'이 아니라 주권적 실체를 가진 대만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불러올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극체제가 세계 질서의 대안일까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반미국가들이 평등과 호혜의 새로운 '다극체제' 국제질서를 견인할 것이라는 NL 그룹 일각의 주장과 달리,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표 정책들이 낳은 결과나 러시아 정치·경제의 "마피아 관례"를 보면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진보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수용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여성·성소수자 억압과 같은 폭력, 인권탄압 행태를 단지 '반서방국가'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못 본 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지지하는 대신, 이들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홍콩, 이란 등지의 민중이 벌이는 투쟁에 주목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회운동이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

1부
북한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01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위협 때문인가요?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적인 탈냉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겼으며, 북미합의의 파기에 앞서 이미 핵개발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국체'라고 부를 만큼 비핵화 의사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를 드러냈고, 전술핵무기 개발 전략과 핵무력법령, 대남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북한과 달리 핵무장 대신 평화로운 길을 통해서 강대국들의 핵 패권 해체와 세계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 그동안 자신들이 내세웠던 요구들이 설령 수용되더라도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북한 핵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적인 정권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면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오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핵무기는 그 존재 자체로 전쟁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인류의 절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신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든 어느 국가든 '자위용'이라는 구실로 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요구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동결·핵감축 협상을 하자는 북한의 접근법)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는 핵전쟁 위험이 영구화된 지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NL 주류의

북핵 인식은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한국 사회운동 내에서 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는 민주노총 강령에도 위배됩니다.

논자,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북핵 문제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옳든 그르든 북한이 핵무장에 나서게 된 책임은 미국의 대북위협에 있으므로, '근본 원인'인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철회되면(혹은 철회되어야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그러므로 진보 진영은 미국의 대북위협 철회 요구와 별도로 북핵 포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장창준, "[통합]진보당은 북핵을 옹호하는가-[통합]진보당 당원, 헌재 판결을 말한다⑤", 《통일뉴스》, 2015.02.05.). 이러한 태도는 남한 사회운동의 임무를 북한 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 즉 본연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이 아닌 미국과 남한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에 국한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②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위협에 따른 방어 목적이라는 주장은, 그러니 궁극적으로 미국이 먼저 비핵화(핵 포기)를 하여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북한도 비핵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세계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북한 당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세계 비핵화", "전 지구상에서의 비핵화"를 지향한다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리를 보면 미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진 이상 북한의 핵을 문제 삼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주

장에 중점을 둡니다("민주당은 '김대중 정신' 되돌아봐야-'북 핵실험 규탄 결의안' 불참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통일뉴스》, 2013.02.15.).

③ NL 강경파 일각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 덕분에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해소되고 우리 민족이 미국으로부터 자주를 쟁취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핵무장이 남한 민중을 위협하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요구와 배치됩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이런 류의 한반도 정세인식의 오류를 밝혀보겠습니다.

① 북한의 핵무장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억압과 봉쇄"가 더 두드러졌던 냉전 시기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탈냉전과 핵군축, 개혁·개방을 통한 블록경제 해체로 나아가고, 이것이 한반도에서도 남한 내 미국 핵무기 철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이러한 대세에 역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즉,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적인 탈냉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반도 1차·2차 핵위기, 6자회담 등 실제 비핵화 협상의 역사를 보아도, 북한은 스스로 한 비핵화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겼으며 북미합의의 파기에 앞서 물밑에서 핵개발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② 현재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공화국의 국체"라고 부를 만큼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니라 남한을 향해 핵

무기를 사용할 의사를 드러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술핵무기 개발 전략과 핵무력법령, 대남'통일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는 소위 '협상용' 핵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핵전력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③ 미국의 핵 패권과 "적대시정책"에 맞서는 비핵평화의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비핵국가와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비핵지대조약, TPNW(핵무기금지조약) 등을 통해 강대국들의 핵 패권 해체와 세계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길 대신 핵무장을 선택한 북한의 행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④ 북한 정권은 비핵화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비핵화 대화의 조건으로 들었던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의미 없는 것으로 규정하며,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조차 대화 재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북한 정권이 핵무장을 통해 얻으려 한 것은 '한반도 평화'나 북한 민중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정권 안전보장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누가 탈냉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했습니까?

이들은 미국과 남한의 냉전적인 봉쇄·고립 전략이 북핵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되고 이른바 '1차 한반도 핵위기'가 일어난 것이 1990년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갈등과 봉쇄·고립 정책이 고조되던 시기가 아니라 세계가 '탈냉전'이라는 중대한

1987년 12월 8일, 미국 백악관에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서명 중인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왼쪽)과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오른쪽).

1994년 1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와 안보 보장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왼쪽), 러시아 옐친 대통령(중간), 우크라이나 크라우추크(오른쪽) 대통령.

전환을 겪던 시기이며, 탈냉전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핵 군축·폐기'였기 때문입니다.

'냉전 종식'의 시작을 알린 사건은 다름 아닌 미국과 소련이 상호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사거리 500km~5,500km인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199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고, 1993년 그동안 자력으로 개발, 은닉했던 핵무기를 공개하며 이를 자진 폐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관계인식에 근거하여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 의무를 명시한 NPT 가입을 거부하던 중국과 프랑스도 1992년 NPT에 가입했습니다. 소련이 해체하면서 과거 소련의 핵무기를 대거 보유하게 된 구소련 국가 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도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통해 핵무기 전량 폐기와 미국·영국·러시아가 약속하는 안보 보장을 교환합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 각서를 위반하고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반도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시되어 1991년 9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정부가 남한 내 미국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며,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가서명하고, 1992년 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팀스피릿'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선포

합니다. 이때가 역사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보장한다"는 NL 일각의 논리를 따르면, 이때는 북한이 그러한 자주평화의 길과 '핵 주권'을 포기할 뻔한 오판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 용어 소개

남북기본합의서란?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문서로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남북한의 상호 체제 인정, 상호불가침, 교류와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차 한반도 핵위기와 맞물려, 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란? 1992년 1월 20일 남북한이 합의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입니다. ▲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공동선언을 깨뜨리고 핵무장에 나섰으나 남한은 현재까지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 8차례의 예비회담 끝에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아래)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되었다.
[사진출처: (위) ≪연합뉴스≫, (아래) ≪동아일보≫]

1차 한반도 핵위기: 북한의 IAEA 사찰 거부와 NPT 탈퇴 선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면 팀스피릿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하였고, 북한은 남한에 배치되었던 미군 핵무기의 철수를 확인하고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핵 관련 시설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1992년 봄으로 예정된 팀스피릿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고 5월에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습니다. IAEA는 1992년 5월~1993년 1월까지 여섯 차례 사찰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달리 북한이 이미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의심할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IAEA는 미신고시설 사찰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초유의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 사건이 이른바 '1차 한반도 핵위기'입니다. 북한은 IAEA의 사찰 요구가 "미국의 거짓 정보제공과 압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IAEA가 NPT 체약국인 북한에 특별사찰을 촉구한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3월 20일, 북한이 NPT에 복귀하면 ①팀스피릿 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 ②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국가시설(미군기지 포함)에 대한 핵사찰을 받아들이겠다 ③북한에 핵공격을 가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겠다 ④남북 간 교역을 확대하겠다 ⑤한국, 미국, 일본이 대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발표합니다. (조건의 내용

을 보면 미국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월 2일에는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을 경우 남한 내에 있는 군사기지와 미군기지의 IAEA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에는 북한의 NPT 복귀, IAEA 특별사찰과 함께 남북 상호핵사찰을 실현할 것을, 8월 3일에는 이를 위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명시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남한과 미국이 "봉쇄·고립 전략을 고수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제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北韓 核擴禁조약 탈퇴

어제 성명발표 "사회주의고수 自衛조치"

"世界非核化에 정부성명 즉각철회·사

"모든 외교관 철수통

IAEA 특별이사회 곧 소집

北韓 공관기관에 외국인접근금지

경향신문 www.kyunghyang.com

북한 정부는 1993년 3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특별핵사찰 요구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여,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결히 옹호, 수호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NPT 탈퇴를 선언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2020년 민주노총 통일학교 교안은 “북의 비핵노력”을 강조하며 1980년대 당시 북한의 동북아 비핵지대, 한반도 비핵지대 제안과 NPT 가입을 예시로 듭니다. 그런데 정작 냉전 종식과 한반도 내 미국 핵무기 철수가 이뤄진 1990년대 초, 북한은 1차 한반도 핵위기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비핵’ 수사를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뒤인 1993년 4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은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져있었습니다. 1991년 2차 범민족대회 결의문에는 “우리들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핵화는 민족의 사활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다”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되었고, 1992년 3차 범민족대회 결의문에도 “남북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담겨 있었던 데 반해, 1993년 결의문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핵 문제를 빌미로 한 외세의 부당한 내정간섭은 중지되어야한다”는 언급만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가 각각 채택한 결의문과 공동결의문을 비교해보면, 남한측 결의문은 ‘한반도 비핵평화지대’라는 언급이 있고 해외 결의문은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이 담겨 있는 반면, 북한측 결의문은 미국의 핵무기, 한미 전쟁연습,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규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향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결의문은 북한 결의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갔고, 남측과 해외본부가 언급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와 비핵화공동선언은 빠졌습니다.

이를 통해, 1차 한반도 핵위기 당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비핵평화지대나 비핵화공동선언을 언급하면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남한과 해외의 통일운동이 '한반도 비핵지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같은 구호를 삭제하게 했고, 남한과 해외의 통일운동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비핵지대를 주장하는 대신 '나보다 강대국의 행태가 더 나쁘다' 식의 수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북핵 문제가 UN 안보리에서 논의되자 1993년 4월 3일 북한

1991년 8월 1일 고려대 학생회관 앞에 범민족대회 사수를 위해 모인 대학생들. 사진 왼쪽 위에 "반미 비핵 군축" 구호가 보인다. 이 시기 범민족대회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전쟁 반대, 핵 반대"와 같은 구호들이 자주 등장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은 "미국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했고 IAEA도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해 NPT를 위반했으면서도, 우리에 대해서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NPT 불이행국으로 규정하여 UN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설령 IAEA의 과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1977년에 남아공의 지하 핵실험 시설이 소련과 미국의 인공위성에 포착되어 UN 안보리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남아공은 결국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2차 한반도 핵위기: 제네바합의 물밑에서의 핵 개발

1차 한반도 핵위기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를 통해 일단락됩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동결하고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대신 북한에 대체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의 과거 핵무기 개발 의혹 해소는 대체에너지 제공 이후로 미루는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보유를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북한에 전했으며, 북한이 놀랍게도 이를 시인했다고 발표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따라 12월부터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 제네바합의 파기와 북한의 NPT 탈퇴가 '2차 한반도 핵위기'입니다. 제네바합의로 1차 핵위기가 가까스로 봉합된 뒤 늦었지만 드디어 한반도에 탈냉전이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

가 커진 상태에서, 2차 핵위기가 일어나며 모든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주장이 오해나 왜곡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2003년 초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해서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증거가 있다며 침공을 개시했으므로, 이런 분석은 설득력 있어보였습니다. 여러 NL 그룹들은 그 뒤로도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HEU, 위조지폐, 마약… 근거 없는 북한 때리기 반성해야", 2007.03.02./강호석, "매번 합의를 먼저 깬 쪽은 미국이다", ≪민플러스≫, 2018.05.21. 등)

2003년 1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NPT 탈퇴 지지 100만 명 군중 대회>. 북한 정부는 전날 NPT 탈퇴 성명을 내어, "NPT를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조선중앙통신≫]

그러나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영변 핵시설 내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둘러본 뒤,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십수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밀접히 관련을 맺었던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와 정치인은 1999~2000년에 북한에 핵기술을 지원하고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시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클린턴 정부 시기이자 제네바합의가 이행되는 기간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제네바합의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자회담의 붕괴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9·19 공동성명(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하겠다고 약속)을 깨고 1차 핵실험(2006년 10월)을 단행한 후에도 6자회담은 계속 열렸습니다. 2007년에도 2·13 합의(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고,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함)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연 북한이 핵 신고서의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를 거부하면서, 6자회담은 2008년 말 중단되었고 그 뒤로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양자 간 회담마저 거부한 채,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거듭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향한 길로 달려나갑니다. 북한은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9년 4월 미사일 실험을,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만약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정말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 때문이라면, 이때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 대신 핵·미사일 실험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진행한 북한의 모습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협상을 위해 핵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기보다 핵무기 보유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략적 인내'를 택하여 이후 8년간 아무런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지 못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돌입

2018년 남북·북미대화는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9.19 남북군사합의 등으로 이어지며 기대를 모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뒤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대화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당시 북한이 밝힌, 하노이 회담에서의 북한 측 요구는 "영변 핵단지 전체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2016년부터 취한 UN 안보리 대북 제재 중 민생에 관련된 것 5개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에 여러 다른 비밀 핵시설들이 있는 상황에서, 영변 폐기가 결정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5개 제재 해제는 사

실상 경제 제재 전면 해제 요구와 다르지 않은데, 2016~2017년 북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5개 제재 조치는 북한 주요 수출품의 수출 금지, 원유 수입량 제한 등 핵심 경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시설 일부 폐기를 약속하되 핵 능력 자체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핵 관련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궁극적 목표는 실질적 핵보유국 상태에서 핵 능력을 동결하고 경제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라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제 아무리 "김정은은 내 친구"라는, 미국 대외정책 전통에서 한참 벗어나있는 트럼프 대통령일지라도 의회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주어야지만 우리도 북한에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더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북한 정권이 택한 '새로운 길'이란 핵 개발을 지속하는 대신 고강도 대북제재 속에서 상당 기간 '자력갱생'을 통해 살아갈 것을 결의하는 '정면돌파전'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북한 주민들에게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라고 주문했습니다.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는 '자력갱생'을 핵심으로 하는 새 5개년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2022년에도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우리 인민은 물과 공기만 있으면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해나가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과 같은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가 끝난 뒤 '자력갱생'을 홍보하는 새 포스터를 공개했다. [사진출처: ≪노동신문≫]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 세계와 한반도가 '탈냉전'으로 접어들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실은, 북한은 바로 이 탈냉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론을 낳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북미 제네바합의,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와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깨뜨리는 과정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탈냉전을 실현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낳습니다. 북한이 제네바합의가 붕괴하기 이전에도 물밑에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었던 일, 전향적 대북정책을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 취임 직후에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무장과 비핵화 약속 위반을 미국의 압박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핵 카드'라는 발상이야말로 냉전적인 접근법입니다. 맨 처음에 강조했듯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는 정의의 무기가 될 수 없고, 핵무장 과정 자체가 전쟁위험을 불러일으킵니다. 탈냉전으로의 시대 전환 과정에서 핵 개발 카드를 택하겠다는 발상은 주변국, 또는 세계 전체와 냉전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동북아시아의 탈냉전은 도저히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전환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비핵지대를 실현하고 주변국과 교류·협력으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박찼습니다. 이를 전부 두둔해온 NL 주류 노선은 남한 통일운동의 위기와 축소를 낳았습니다.

핵은 국체이며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북한 정권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북한 정권은 조금도 비핵화 의사가 없으며 핵무기에 '선제적 공격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제정한 핵무력법령을 보면, 북한 정권의 핵 결의가 '억지'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서 전쟁에서 선제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공격' 측면,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 번 양보하더라도 이를 도저히 '자위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전술핵무기의 사용대상이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점도 명확합니다.

2022년 9월 9일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을 밝히며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23년 10월에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어 58조에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고 명시되었다. [사진출처: YTN]

핵무기는 북한의 국체?

2022년 9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절대로 (미국보다)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발언하고, 급기야는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도, 북한의 핵보유를 영구적으로 굳히는 데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을 공개하며,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유의 선제 핵공격 법제화

이날 공표된 새로운 핵무력정책 법령이란 북한의 핵 교리를 공식적으로 '억제수단'에서 '선제 공격수단'으로 바꾼 법입니다. 이 법 서문은 "핵 무력은 영토 완정을 수호한다"며, 핵 무력을 남북통일의 수단으로 내세웁니다. 이 법이 규정하는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쟁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입니다. 즉,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라도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위험에 처한다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말도, 외부로부터 실제 공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북한 당국의 판단만 있으면 선제 핵공격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은 핵무기라는 '절대병기'의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고,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을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전적인 핵 태세,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드는 모습은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전 핵 교리인 2013년 '자위적 핵보유법'에서 핵무기를 ▲핵전쟁 억제 수단 ▲선제핵타격에 대한 보복 수단 ▲핵공격 방어 수단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나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2년 핵무력법령은 북한 정책 내에서도 큰 변화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핵정책법령'은 서문에서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고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핵무기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현재의 북미대치 상태가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략) 북한은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정책법령'을 마련하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
> - 2022년 민주노총×겨레하나 노동자 통일교과서3 『패권의 종말과 대전환, 우리 노동자는』

그런데 민주노총과 NL그룹 겨레하나가 공동 발간한 2022년 노동자 통일교과서3 『패권의 종말과 대전환, 우리 노동자는』은 이 법이 미국의 선제핵공격을 막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런 변화를 옹호합니다. 여기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근거를 대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미 2022년 3월 핵선제공격 교리가 포함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공개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NPR에 '핵선제불사용'(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음)이나 '단일 목적'(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반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핵무기를 사용) 원칙을 추가하려다 철회했을 뿐, 이전 정부들보다 더 호전적인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NPR이 오히려 더 호전적인 내용이었으나, 네 달 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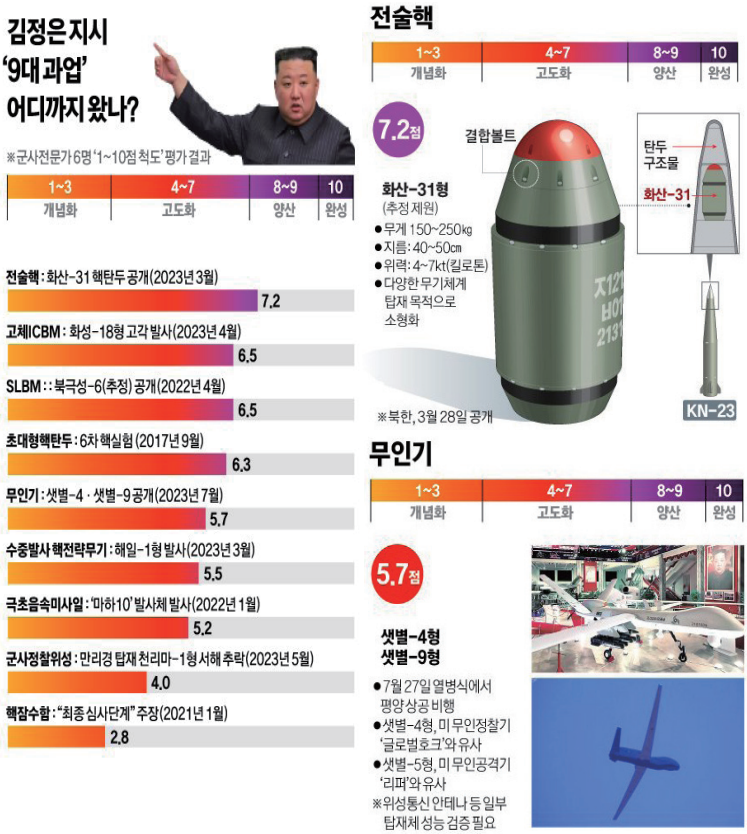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하면서 대남용, 실전용 전술핵 개발이라는 전략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전술핵무기란 통상 단거리 핵무기를 의미하므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무기입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수십 차례 진행했는데, 전술핵무기 개발이란 바로 이러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또한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검증하는 식으로 이뤄지리라 전망합니다.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은 이미 작년 5월 시점에서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대

통령실)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언제 핵실험이 이뤄져도 놀랍지 않을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해 남한에 핵무기 실전 사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2년 9월 25일부터 2주간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전술핵부대 운용훈련'으로, 모두 핵 탑재를 가정한 모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훈련을



인포그래픽 출처: 2023년 8월 18일 ≪중앙일보≫

직접 지도하며 "전술핵 운용부대들에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게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2023년 8월《중앙일보》가 국방 전문가 6명에게 의뢰해 진행한 평가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당대회에서 직접 개발을 지시한 9가지 무기 체계, 즉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핵탄두 ▲무인기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정찰위성 ▲핵잠수함의 개발 수준은 평균 5.5점으로(4~7점은 고도화 단계, 8~9점은 양산 단계, 10점은 완성), 이미 고도화 단계의 중반을 지났습니다. 특히 전술핵(7.2점), 초대형핵탄두(6.3점), 고체연료 ICBM(6.5점), SLBM(6.5점) 등 실제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 4개 분야는 이미 실전 배치를 바로 코앞에 둔 단계(평균 6.6점)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북한 당국의 전략에 따른 것

통상 진보당을 비롯한 여러 NL그룹들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무력시위는 한미당국의 군사훈련 등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이래로 '북미 모라토리엄', 즉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암묵적 합의는 남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한미당국이 먼저 깬 것이 아니라,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여 파기되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때문에 진보당조차도 "이번 발사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미당국이 먼저 모라토리엄을 깨거나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군사행위를 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진보당은 모호하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배경"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과 진보당,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NL 주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란 표현을 대북경제제재,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를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들의 논리에서 북한의 군사행위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국면은 없습니다.)

>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만의 일로 2018년 4월 대미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 (중략) 이번 발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 1월 진행된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규탄과 함께 2018년 이후 취해졌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다.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배경인 것이다.
>
> - 진보당 논평, "북미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03.25.

이때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8월 22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미 총 18차례의 미사일 발사(8월 17일

기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평가한 동향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준비는 한미 당국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기보다는 남한을 타격할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자체 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조선과의 전쟁에 핵전투 무력이 동원될 것"

북한 당국은 선제핵공격 법제화, 전술핵 개발뿐만 아니라, 작년 초부터 남한에 대한 핵공격, 선제 핵공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2022년 4월 5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미용 핵'이라는 그간의 주장과 달리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4월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분쇄하고 제압하기 위해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역시 '전쟁 억지용' 핵이라는 그간의 명분을 넘어 북한 정권에 대한 위협에도 선제적인 핵 공격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2023년 북한 당국은 '대남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점까지 드러냅니다. 북한 국영통신사인《조선중앙통신》은 3월 18~19일 김정은 전술핵 운용부대가 실시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 내용을 공개했는데, 평안북도 철산군 발사장에서 발사한 전술핵 시험용 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이 800㎞를 날아가 동해 상공 800m 고도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특정 고도에서 폭발 가능한 핵·미사일 탑재용 탄두부를 시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킨 것은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험으로, 사거리 800㎞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8월 10일《조선중앙통신》은 군사회의에서 지도 위 서울 부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라"는 발언을 공개했고,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노동신문》도 한국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한미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응하여 "남반부(남한) 전 영토 점령"과 "해외무력개입 파탄"을 목표로 하는 '전군지휘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30일 심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대한민국 군사깡패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해 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실전용 핵'을 추구하는 최근 북한의 핵 전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실제로 한반도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남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입장은

2022년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여 남한 지도를 짚어보이는 김정은 위원장.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대남군사작전 초기에 "군사지휘거점과 군항, 작전비행장 등 중요 군사대상물에 동시다발적 초강도 타격을 가해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조선중앙통신≫]

대개 남북한 간 재래식 화력 차이와 한미군사동맹의 존재를 고려하면 북한이 개전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고도화는 미국 본토에 핵 위협을 가하여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남한에 전술핵을 투하하거나 투하 위협을 하여 남한의 재래식 화력을 제압하는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르는 명칭) 최초 시나리오가 핵 위협을 통해 서방의 직접적 개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와 비무장화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목표였던 것과 유사합니다.

북한 당국이 밝히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전술핵무기)을 계룡대와 같은 남한의 군사적 "중요 지휘 거점"에 투하하여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고 '핵 공포'를 불러일으켜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미국 본토에 ICBM을 발사하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하여 "해외무력개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추가 핵공격을 위협하며 남한의 항복 또는 배상을 요구할 것인데, 이는 심지어 남한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회수하는 '일국양제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백승욱, 『연결된 위기-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얄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의힘, 2023).

북한의 핵 전략 자체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비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 훈련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의 변화 또한 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경제 개혁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을 가능성도, 남한에 대한 군사적 모험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올해 북러정상회담이 보여준 가능성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부족한 첨단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아 미사일 개발 시간표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만 '통일'이 중국 지도부의 핵심 과제가 되면서, 기존에는 자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전쟁 발발을 막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중국의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북핵 문제를 대만 문제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장과 남한에 대한 핵 위협을 사실상 용인할 수 있습니다. 대

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작전이 전개될 때 동시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남 공격이 일어나면, 미국의 대만 위기 개입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을 거부해왔습니다.

'조국통일'만 된다면 북한의 대남전쟁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NL 주류는 이러한 북한의 행보를 "조국통일의 방도가 바뀐 것" 정도로 이해하고 일체의 문제제기 없이 긍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1년 2월 20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참가한 '2021년 진보진영 계획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2021년 정세전망의 첫 번째 순서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는 NL 주류의 최대 연대조직으로, 4.27시대연구원, 국민주권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진보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한국청년연대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발제에 따르면, 8차 당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 것을 명시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명시한 7차 당대회 당시 규약과는 명확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북한에서 당 규약이란 헌법보다 위상이 높으므로 이는 정말 중요한 변화이며, 당 규약은 반드시 '결

사관철'되어 왔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L 주류의 최대 정당이자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정당 중 하나인 진보당도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2021년 1월 21일)에서 같은 변화를 지적하며 "핵무력 완성을 통한 강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입장을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대미 전략무기와는 별도로 다양하게 개발된 초정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군사정찰위성, 최근 열병식에서 보여준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는 북의 국지전, 조국통일대전의 준비정도와 수준이 빈말이 아님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중략)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면 교전쌍방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된다. 따라서 기존 통일원칙에 반하는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개념도 이해할 필요성이 생겼다. (중략) 비평화적 방도는 다양한 무력, 군사력에 기초한 통일방식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핵 군사력 무력시위와 대결에 의한 강제된 평화협상 타결도 포함된다고 본다.
>
> - "새로운 격변기를 준비하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민플러스》, 2021.02.01.

민주노총의 통일 관련 교육, 사업을 도맡고 있는 ≪민플러스≫는 이러한 북한의 행보를 대남 '조국통일대전(大戰, 큰 전쟁) 준비'로 명명하고 심지어 이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남한이 대상이 될 "북의 국지전, 조국통일대전" 준비 정도와 수준이 빈말이 아니라며, '비평화적 방도'(군사력)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제는 이러한 "기존 통일원칙에 반하는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6년 김

정은 위원장의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려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합니다.

또 다른 NL계열 언론《자주시보》도 올해 4월 한미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이 "'남반부 해방전쟁', '조국통일대전'을 앞당김으로써 윤석열 정권과 한미연합군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고 주장합니다(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누가 누구의 파멸을 재촉하는가", 2023.05.08.). 올해 3월 북한의 '화산-31' 전술핵탄두 공개는 "핵탄두가 실전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며, '남반부 해방전쟁'의 목적은 "윤석열 정권과 한미연합군을 제거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전술핵무기 실전사용, 대남전쟁, 무력통일 시나리오를 조금의 비판도 없이 분석하고 유포하는 NL 주류의 태도는, 이들이 김정은 정권 주도의 "비평화적 방도"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하자는 생각을 은밀히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국 시민들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이나 대남전쟁 개시가 현실이 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한반도 민중의 삶과 일상이 파괴될 것이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파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 패권에 핵무장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대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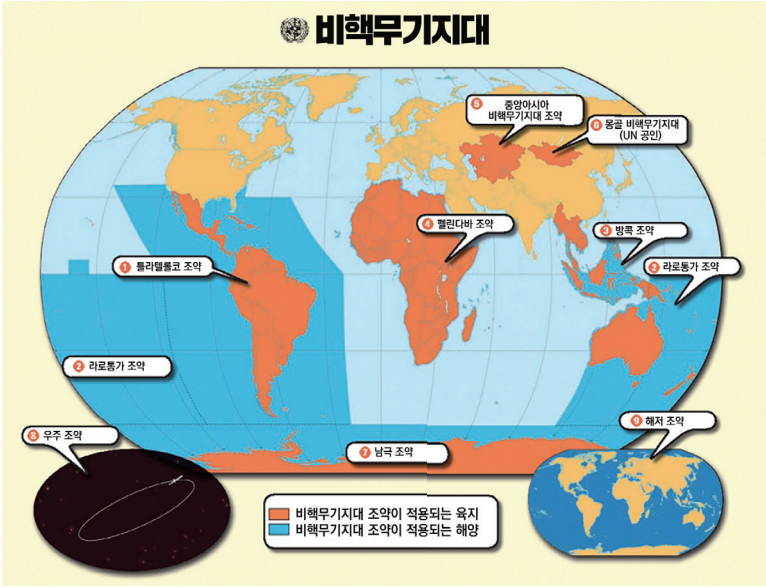
북한은 미국의 핵 패권에 반대하는 방식조차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NPT로 상징되는 세계의 핵 비확산·통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것은 맞습니다. 5개의 강대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만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하니까요. 이에 대해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교과서4『위기의 한국사회, 노동자의 활로찾기』는 핵무기를 보유한 5개 강대국이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NPT를 통해 강대국의 핵독점 체제를 만들어 다른 국가를 통제하고 압박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핵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 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2000년대 초반에 핵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북한이 2017년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이 체제는 붕괴되었다고 씁니다. NPT 체제는 강대국들에만 이로운 '악'이므로 이에 도전하고 균열을 낸 북한의 핵무장에 긍정적 의의가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핵독점 체제가 불공평하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을 반핵평화운동을 통해 강대국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의 핵무장으로 바꾸겠다는 시도가 과연 '선'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도는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미국에 대항한다며 너도나도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서면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NPT가 발효한 1970년 당시, 이미 수십 개의 국가가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계에도 불구하고 NPT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과학기술이 그때보다 발전했고 전후 세계질서가 위기를 겪는 지금, NPT 체제가 붕괴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혼돈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가 NPT

의 틀 안에서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를 활용하여 핵보유국의 핵군축 상황을 검증하고 압박하며, 지역별로 비핵무기지대를 확립하여 상호 간의 잠재적 핵 위협과 핵무기 보유국의 위협을 최대한 배제하고, NPT를 뛰어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추진하는 식으로 핵무기 보유국에 핵군축을 압박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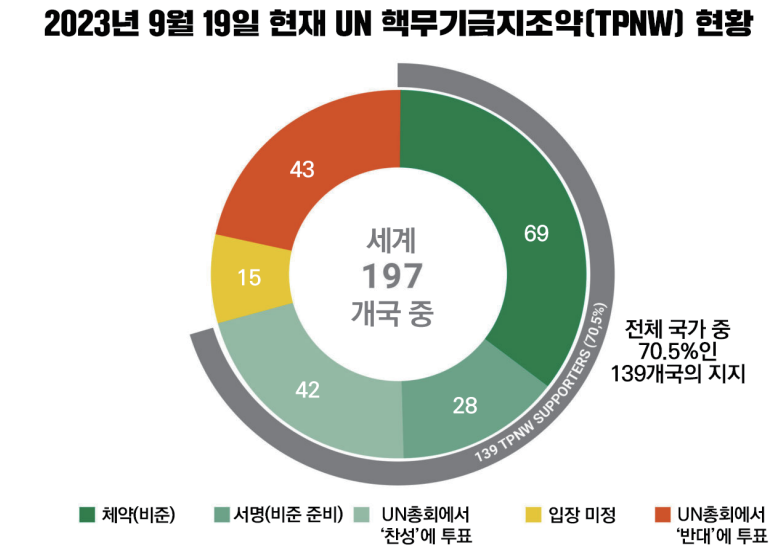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공격을 당한 나라는 베트남, 쿠바, 멕시코, 파나마, 팔레스타인 등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부 핵무장에 나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 전쟁과 학살, 식민 지배를 경험한 '약소국'들의 대부분은 UN 핵무기금지조약에 동참하고 있습니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몽골 등 세계의 상당 부분이 비핵무기지대다. 남극, 우주공간, 해저공간도 국제조약으로 핵실험, 핵무기 반입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인포그래픽 출처: UN / 한국어 번역, 편집: 사회진보연대]

다. 이렇게 강대국의 핵 패권에 맞서는 다른 길, 평화의 길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북한의 핵보유 고수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북한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세계 190개국이 가입해 있는 NPT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현존 제도 안에서 해법을 모색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세계 비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 노선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견 모순적인 이러한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준다면 2003년 탈퇴한 NPT로의 복귀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핵확산 통제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기존 핵보유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전 세계의 비핵화'를 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제 6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NPT 체제 자체가 신뢰성을 상실하므로,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7일 UN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2023년 9월 19일 현재 69개국이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했다. [인포그래픽 출처: Nuclear Weapons Ban Monitor / 한국어 번역, 편집: 사회진보연대]

◎ 용어 소개

NPT(핵무기비확산조약)란? 1970년 발효된 NPT는 세계에 핵무기 보유국이 우후죽순 늘어나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자 한 국제조약입니다. 당시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5개 국가, 즉,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대신 이 5개국은 핵군축 교섭에 노력을 다할 것과 핵발전 기술을 핵 비보유국에 이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NPT에 따른 국제 핵 통제 체제를 흔히 'NPT 체제'라고

부릅니다. 현재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NPT를 가입했다 탈퇴(2003년)하여 핵무장에 나선 사례입니다.

비핵지대란? 비핵(무기)지대(NWFZ)는 국제조약으로 비핵화를 합의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역마다 조약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지역 내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실험, 제조, 저장, 배치 등 핵 활동을 금지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이 지역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이 비핵지대를 건설하여 핵무기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동북아시아, 중동 등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지역 내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비핵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이란? 2017년 7월 유엔총회에서 122국의 찬성으로 통과된 핵무기금지조약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사용, 사용 위협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상 최초의 국제적 합의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세계 50개국 이상의 비준이라는 발효 요건을 달성하여 90일 후인 2021년 1월 22일 공식적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비공식 핵보유국(북한 포함)들과 한국, 일본은 핵무기금지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핵무기입니까?

주한미군 철수조차도 대화 재개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북한

올해 북한 정권은 대화의 문턱을 더욱 높이며, 핵 보유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 정권의 안위 보장임을 드러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7월 17일 담화에서 "우리는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그간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던 대북적대시정책·이중기준(북한의 군사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북한의 주장) 철폐를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에 포함하던 요구들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마음만 먹으면 10여 시간이면 전개가 완료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병력을 재투입하여 재개하는데 20일이면 충분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오는 데는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나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와는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군사적 공세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힘에 의한 평화'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비가역적' 조건이 무엇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한 정권의 안위를 비가역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말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영향으로 보이는, "북한은 지도자와 인민이 일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돌아가는 사회"(《민플러스》 데스크칼럼, "대북전단 살포를 영구적으로 중단시켜야 할 이유", 2020.06.13.) 류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이란 사실상 북한 정권, 특히 3대 세습이라는 기형적 체제의 안전을 뜻하며, 이것이 북한 핵무장의 근본적 배경입니다. "핵은 우리의 국체"란 발언은 정권의 생존을 핵무기라는 반인도적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선택으로 인하여 북한 민중이 치룬 희생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대기근과 경제난을 비롯하여 어마어마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일본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 또한 희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없습니다

그동안 NL 주류는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행위는 한미 당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대한 '강대강' 대응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판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단,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서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대북제재 완화가,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조차도 '대화와 평화의 길'에 나설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운동에 어떤 의미가 남을까요?

결국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핵

전쟁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운동이 이 지점을 외면한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셈이며, 한반도 핵위기는 영구화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행위와 군비증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 민중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

02

북한 체제 자체에는 진보적인 면도 있지 않나요?

북한의 핵무장, 인권탄압, 3대세습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라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진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위기는 '혁명 수호'를 명분으로 법치주의 대신 '혁명적 폭력'을 정당화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결함에서 비롯하였으며, 북한 세습정권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을 탄압하고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보적 사회운동 대다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넘어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지향해왔으며, 197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 헤게모니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본주의 체제 및 미국과 대립해 온 북한 체제의 문제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NL 그룹은 북한 체제가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미국에 종속된 국가들보다 더 우월하고 진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의 '백두칭송위원회'나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뿐만 아니라 "2020년 북은 코로나 발생율 0%, 국격 100%, 이렇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유일국가"(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국가와 지도자, 그리고 인민이란 무엇인가?", 2020.12.31.)라는 ≪민플러스≫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은 수령제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방식의 권력체제 … 수령제 사회주의는 수령(지도자)-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당내 분파와 권력투쟁을 인정하지 않는다. … 검증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해 세간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 북녘 사회의 전반적인 기풍을 혁신 … 무엇보다 군사외교적인 면에서 5년 여의 집중적인 (핵)개발과 대결을 통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현재 사회주의 강국 건설, 비핵화와 국제평화 선도, 대등하고 평화적인 북미관계 지향을 내세우고 있다.

- 2018년 민주노총 소책자 『평양, 모른다고 하면 안되갔구나~: 2018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 중

민주노총 유관사업을 보더라도, 민주노총이 2018년 발간한 『평양, 모른다고 하면 안되갔구나~: 2018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 소책자는 북한의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2017년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이었다고 명시합니다.

민주노총의 인터넷 매체 ≪노동과 세계≫에 연재된 〈최재영의 북녘노동자 이야기〉(2020.05.20.)도 "어린 시절 꿈이 노동자가 되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북에서의 노동자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자본주의 남측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리는 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조선노동당) 당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본가들이 이끌어가는 남측사회와는 달리 북측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임을 알아야 한다."와 같이 북한 체제가

더 노동자 친화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이러한 북한 체제 찬양은 우리의 직관에 반합니다. 북한에 심각한 인권위기가 존재하며 남한보다 살기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일반적 상식 때문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도, 북에서 남이나 제3국으로 탈출하는 사람은 많다는 경험적 사실도 이를 방증합니다. 서문에서 언급했듯, 북한에 대해 논할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주제는 북한의 핵무장과 주변국 위협, 북한인권, '3대세습'입니다. 이 중 핵무장에 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운동은 북한인권 문제의 존재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서방의 모략, 위선", "내정간섭"이라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는 NL 주류의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진보당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잣대로 다른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지 말고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인권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무산의 의미", 민중당(현 진보당) [정책과 논점] 2018-39호, 2018.12.14.).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인권 위기는 UN 차원에서 심각하게 조사하고 제기하는 쟁점입니다. 여러 교차검증을 통해 심각한 위기가 실존한다고 밝혀진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힘든 상황에서 북한인권 관련 담론은 과장 내지 악용된 측면도 있지만, 북한인권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이 문제를 사실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운동의 이해(利害)'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이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진보의 관점에서 제시하지 못하면서 북한인권 담론이 더욱 왜곡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인류가 보편적인 합의를 추구해 온 인권을 개별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거나 침해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 사회운동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사례가 그렇듯 많은 경우 인권탄압의 주체는 각국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2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커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최종보고서를 들고 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며 그 책임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COI는 김 위원장에게 보고서 전문과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자유 없이 평등이 가능할까요?

북한 정권은 인권 담론을 서구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권, 정치권을 중시하는 서구식 인권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지도자와 인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북한 사회"는 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식 인권', '사회주의 인권'을 내세우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권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으로, 《노동신문》의 '우리식 인권' 해설을 보면("참다운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동신문》, 1995.06.24.)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가 '천부인권', 즉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절대 박탈해서는 안 될 보편적 권리가 있다는 개념을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수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인권에 있어 정치적인 자유권보다 경제적인 사회권을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권리, 특히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유한 논리였으므로 이 부분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사회관계와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서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적, 즉 "평등 없이 자유 없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회권과 평등을 우선시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 논의 또한 역사 속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

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민중이 사회적, 경제적 권리 신장을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이 평등 없다"도 타당했던 것입니다. (UN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및 행동강령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은 불가분, 상호의존, 상호연관 관계이며 개인들이 둘 중 하나만으로 온전히 인권을 향유할 수 없음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사회권은 단순히 "모든 인민이 기와집에서 이밥(쌀밥)에 고깃국

◎ 용어 소개

자유권이란? 인간이 누려야 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로,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 금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금지, 이동과 거주의 자유, 재판에서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권리,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참여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당사국입니다.

사회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인권들로,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식량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사회권규약을 비준한 당사국입니다.

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1962년 김일성 북한 수상의 발언)을 누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도층의 선정(善政)으로 인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꿈은 현대 이전의 왕조국가들도 이상향으로 삼았던 개념입니다.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경제 운영과 분배의 주체가 되어야, 즉 생산수단의 소유가 사회적으로 이뤄지고, 노동자가 생산과정과 잉여생산물의 사용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어야 사회주의의 맥락에서 사회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도 그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정당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노동자 인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당-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노동자들이 생산과정과 잉여생산물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노동조합은 당의 방침과 생산계획을 노동자들에게 하달하는 '전달벨트'로 전락합니다. 그럼에도 '노동자국가'에서 국가 공식 노동조합 밖의 또 다른 노동조합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로 자주적인 노동자조직 결성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에서조차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UN 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관리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조합은 국가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하자, 자

유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는 요구가 곳곳에서 분출됩니다. 이러한 자유노조 운동은 초창기에 반체제적 목표보다는 '성공적인 공산주의의 건설을 돕고 관료주의와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와 같이 자유노조(연대노조) 운동이 성공하여 민주화운동을 이끈 사례도 있습니다.

자주적 노동자 조직이 없는 북한이 노동자국가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북한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자주적 노동조합이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권도 부재합니다. 북한의 유일한 노동자 단체는 조선직업총동맹(직총)입니다. 직총은 그간 민주노총의 교류 대상이었으나, 민주노총이나 여타 국가의 노동조합과 같은 자주적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북한 정치사전(1986년)과 조선대백과사전(2000년)에 의하면, 직총의 기능과 역할은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직총 규약은 "조선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 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 수행에로 조직·옹호하며, 매시간 당이 제시한 과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직총은 조선노동당의 강력한 통제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당과 노동계급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전달벨트)',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 단체'의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2016년 10월 27일 평양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 35년 만에 열린 조선직업총동맹 7차 대회의 모습. [사진출처: ≪조선중앙통신≫]

1947년 북한 내 '노동조합 성격 논쟁'에서, 일제시대 함경남도에서 오랫동안 노동조합 조직가로 활동하며 1929년 원산총파업을 후원한 토착 공산주의자 오기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노동국장은 산업이 국유화되었더라도 완전히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계급적 대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 노동자들의 유일한 조직인 노동조합(직업총동맹)은 국가에 종속되는 대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일성 위원장은 "노동자는 국유화된 산업경제기관에 반대하여 투쟁할 수 없다"며 오기섭을 공격했고, 오기섭은 1958년 숙청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인권탄압?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자유권 침해는 법 외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형법 체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크다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소련의 형법은 "사회주의적 관계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보호, 강화,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이는 '혁명적 폭력'으로 정당화됩니다. '당의 지배'가 '법의 지배'(법치주의)에 우선하게 됩니다. 현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 여겨지는 죄형법정주의가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 처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법 인식은 특히 스탈린 통치기 대규모 인권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의 '계급적 소속, 반혁명 목적'에 따라 '사회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제 행위가 아니라 범인이 얼마나 위험하냐에 따라 형벌을 정하라는 규정은 수많은 이가 '인민의 적'이라는 혐의나 출신성분만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된 이들은 재판도 없이, 따라서 제대로 된 항변의 기회도 없이 유형, 추방, 정치범수용소(악명 높은 '굴라크')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혁명범죄'의 범위는 갈수록 커져, "직접 반혁명의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용인하는 경우, 또는 행위 결과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즉 미필적 고의, 과실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소련 인민들이 혹시 모를 처벌을 피하고자 주변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 용어 소개

법치주의(법의 지배)란? '법치'라고 하면 "반드시 법을 지켜라"는 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 국가들의 기본적인 원리인 법치주의는 사람의 주관이나 폭력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지도자나 세력이 자의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시

민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하는 목적이지요. 예를 들어, 영국의 역사를 보면 법(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등)을 통해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사람들을 구속, 처벌하는 것을 제한하고, 왕도 이 법을 따르도록 한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죄형법정주의란? 현대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범죄와 형벌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법관은 이에 근거해서 판결해야만(유추해석 금지)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사람들은 행위 당시에는 나중에 처벌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형법이 정적을 처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동일한 문제가 북한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는 스탈린 통치기에 대한 비판과 법 개정, 정치범 사면·복권도 가능했으나, 북한의 역사는 김일성 주석과 그 측근이 갈수록 권력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에서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 시도가 실패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숙청이 이어지면서 조선노동당 내 김일성 비판 세력이 전부 제거되었습니다. 김일성 1인지배체제가 이렇게 확립되어 지속되었고 이는 김정일, 김정은에게로 세습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당의 지배'가 '법의 지배'에 우선합니다. 1958년 김일성 수상은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당의 령도(영도)를 떠나서 법에만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복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왜곡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사법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독재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들의 권력적 활동"으로 여겨지며, 그러므로 사법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북한 형법 또한 반국가범죄, 반혁명범죄, 반민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앞서 보았듯 북한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무제한의 공소시효가 부여되며, 2004년 형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국가반역죄(탈북 관련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민족반역죄에 대한 처벌은 오로지 사형뿐이었습니다. 1950년 제정 당시부터 2004년 개정 이전까지는 형법이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부정했는데, 이는 "법이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당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식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권력세습과 정권 유지의 어려움은 탄압의 강화로 이어졌는데, 일례로 북한은 여러 차례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통치력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북한 당국은 법규범 강화로 대응했습니다.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형법을 개정했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혁명사적사업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제정했습니다.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

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존엄모독죄', 한국 영화 시청·열람 행위나 방역조치 위반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이는 UN 자유권규약이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2022년 8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UN총회를 앞두고 발간된 UN『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엄격한 코로나19 통제로 북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법 앞의 만민 평등'을 뜻하는 현대 법치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폭력'의 정당화를 따른 북한 형법은 결국 정치적 탄압과 통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 결과 정치범수용소, 즉결처형·공개처형과 같은 극단적 인권탄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인포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북한 내 극단적 자유권 탄압의 사례들

① 정치범수용소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중대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법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으로, 이중 2023년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시설은 5곳(평안남도 2곳, 함경북도 2곳, 함경남도 1곳)입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연좌제'에 따라 가족을 함께 수용하면서 여러 '리'나 하나의 '구'에 해당할 만큼 넓어진 마을 형태와,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는 교화소 형태가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탄광, 금광 등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치범'의 수용 이유는 출신성분 문제, 소위 '말 반동' 등 김일성, 김정일 권위 훼손과 관련된 문제, 간첩행위,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이나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와 관련된 문제, 남한행을 시도했거나 가족이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경우, 남한 거주자와의 통화 등 남한 관련 문제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수용자의 식량, 주거, 생활, 의료 환경은 물론 매우 열악하며, 공개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② 즉결처형·공개처형

생명권은 모든 인권의 기본이며,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만 합니다(UN 자유권규약 제

6조). 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 즉결처형과 같은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은 금지됩니다(자유권규약 제14조). 설령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하여 권한 있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사형집행 공개는 자유권규약 제7조가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며 이를 목격하는 이들에게도 심각한 인권탄압입니다.

그러나 UN,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즉결처형·공개처형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결처형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되었습니다. 대체로 공개처형은 운동장 등에서 총살로 실시되고, 주민은 학교, 기업소, 인민반을 통해 동원되어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됩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33회기 제8차 회의에서 "사형은 희생자의 유가족과 다른 관련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집행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답변하며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핵 개발과 인민의 식량권, 건강권 중에 무엇이 중합니까?

북한은 자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며 사회권을 강조합니다. 인권 실현의 물질적 기초인 식량, 건강 등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북한 체제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인권이 더 잘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와집에 비단옷"까지 바라지 않더라

도, 북한에서 사회권의 일환이자 생명권과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인 식량권, 건강권이 잘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초유의 식량위기를 겪었고, 현재에도 식량, 의료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정황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하여 북한의 공식적인 매체들에서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먼저, 북한은 인민에게 필수적인 식량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2022 세계기아지수에서 북한은 24.9점으로 심각 단계, 조사 대상국 121개국 중 97위입니다.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세계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에 따르면 2019~2021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0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6%입니다. 이는 지난 2004~2006년 810만 명에서 약 260만 명 가량 증가, 비율로는 33.8%에서 8%p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WHO, UNICEF가 발간한『2021 세계 영양 보고서』는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비율을 19.1%로 추산했습니다.

건강권의 경우, 과거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복지인 무상의료제와 예방의료는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합니다. 개인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음지에서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고됩니다. (의료인력이 국가가 지급하는 봉급을 통해 생계를 꾸리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2년 WHO와 UNICEF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봉쇄 상황에서 외부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2021년 북한의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을 위한 DPT 백신접종률은 2020

년 98%에서 42%로 급감했고, B형 간염 접종률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접종률도 97%에서 41%, 수막구균 접종률도 99%에서 42%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0년 98%였던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무려 17%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0%인 단 2개국이 바로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에리트레아와 북한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 노선을 고수하면서 이와 같은 식량위기와 보건위기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2016~2017년 연이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UN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낳았고, 이는 북한의 경제위기와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경제위기를 언제까지고 견디자는 '자력갱생' 노선을 2021년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정식화하고, 계속해서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이 7월 발표한 '202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7조 원으로 남한의 1.7%에 그쳤으며, 연속해서 역성장(마이너스 성장)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개입 여지를 최대한 피했는데, 특히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다양한 제안을 거부하여 북한 주민이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은 채로 코로나19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가 대기근으로 이어지던 때에도, 다른 국가라면 선택했을 대외교역·투자 확대, 원조 요청, 경제관리 개혁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식량원조가 개시된

이후에도 북한 당국이 그 덕분에 절약된 외화를 식량 추가 수입에 쓰지 않고 군수용품이나 상류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에 할당했으며,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2000년까지 대기근이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최소 생존수준을 넘어서 정상적인 수준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스테판 해거드·마커스 놀랜드, 『북한의 선택』, 매일경제신문사, 2008.). 북한 당국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인민의 식량권·건강권, 나아가 생명권 그 자체보다 정권의 안위를 정책 목표의 가장 우선순위로 보이게 합니다.

현재에도 식량과 보건 환경 개선에 쓰일 수도 있을, 북한 경제의 너무나 막대한 부분이 군사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민중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부재한 현실도 문제입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1년 연감』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세계 평균 GDP 대비 군사비 비율(2.4%)보다 10배 이상, 즉 GDP의 20% 이상을 군사비에 쏟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는 북한이 2022년 상반기에 발사한 미사일 33발의 비용을 북한 전체 인구에 접종하기 충분한 코로나19 백신과 식량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합니다.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어려운 북한의 경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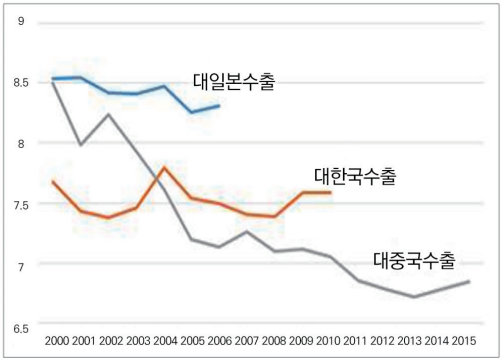
북한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어긋나는 대중국 무역의존성 심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는 이미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이나 UN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중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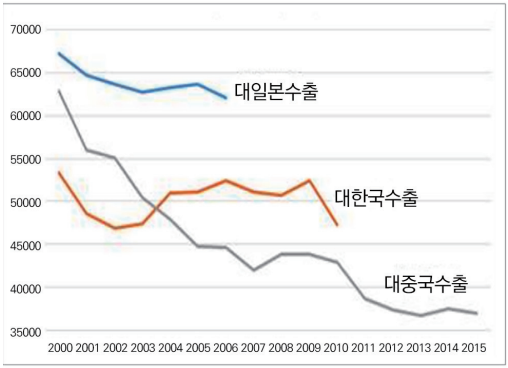
원조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 의존 현상은 북한 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에 빠진 2010년부터 시작했지만, 2016~2017년 북한의 핵·ICBM 실험으로 UN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북한 경제가 고립되면서 유일한 길로 남았습니다.

각 국가별 북한 수출 RFI(인적, 물적 자본) 추이(2000년~2015년)

(A) RFI(인적자본) 추이



(B) RFI(물적자본) 추이



특정 국가가 무역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축적하는지 평가하는 척도로 '현시 요소 집약도'(RFI)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북한이 과거 한국과 일본에 수출했던 제품들의 RFI는 대중국 수출품에 비해 인적, 물적 자본 측면 모두에서 월등히 높았다.
이는 북한경제의 성장에는 대중국 교역이 아니라 대한국, 대일본 교역이 유리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수출 RFI는 인적, 물적 모두에서 2000년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그래프 출처: KDI]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 UN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킬 생각이 없는 중국과의 교역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어 핵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의존 전략은 북한경제의 진정한 '성장', '자주'와 역행하는 효과를 낳을 공산이 큽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연자원을 파는 수출구조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투자와 기술 개발·교육·훈련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경제협력도 불가능

통일경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결합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 통일경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자주통일정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 성립기에는 외세의 제재와 봉쇄의 압박을 견뎌내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정착기에는 통일국가의 물질적 담보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경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전망적으로는 자주, 친선, 평화에 입각한 대외경제관계, 국제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자립적 민주경제, 자립적 통일경제는 진보민중진영의 대안경제전략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가장 과학적인 대안이며, 둘째로 유일한 대안이며, 셋째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 있다. 오직 통일경제만 중미분리시대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지정학적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자립적 민주경제, 자립

적 통일경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즉각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 민주노총 총서 2021-03『탈세계화 시대 한국경제 구조 진단 - 예속과 불평등을 중심으로』중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파기 이후 남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임에도, 여러 NL론자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등은 민족경제·남북통일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서비스연맹이 2021년 8월 발간한 총서『탈세계화 시대 한국경제 구조 진단 - 예속과 불평등을 중심으로』의 결론인 '자립적 민주경제와 통일경제에 대한 모색'에서 필자인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은 남북한 공동의 '자립적 민주경제와 통일경제', 나아가 이를 통한 '연방형 경제공동체'라는 통일 방안을 한국 경제의 진보적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 당시 민주노총 성명 "요소수 대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주노동연구원, 서비스연맹 총서와 같은 맥락의 정세인식을 드러냅니다. 성명은 요소수 대란의 근본대책이자,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목표로 제시하는 '한국사회 대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출중심, 무역중심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불평등한 대외관계, 불균형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민플러스≫의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겪지 않으려면"(2021.11.12.)은 이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은 "중미대결"로 글로벌 공급망, 물류망이 붕괴하는 현재는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탈세계화, 자주화

의 시대가 오고 있는" 때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자립형 통일경제"라고 합니다. "북은 세계 자원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그 양과 질 면에서도 손꼽힌다. 남과 북이 원자재 자립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협력한다면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통일경제는 자립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내수기반 자립경제는 과잉수요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패턴을 만들게 한다. 최근 러시아에서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철수하면서 러시아식 맥도날드, 스타벅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자기식의 수요공급체계를 가져가야 국력에 맞게 생산과 공급, 수요와 소비를 적절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
> 통일경제는 에너지, 원자재 강국의 길,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이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관광대국으로 갈 수 있다. 한반도와 만주·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면 지속가능한 내수 경제가 가능하다.
>
> -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교과서4 『위기의 한국사회, 노동자의 활로찾기』 중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교과서4의 결론 또한 지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무너지는 '탈세계화' 시대로,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이 늘어나고 "기형적인 대외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기반의 경제구조로 전환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일한 대안이자 강국의 길로서 자주적 민주경제, (남북)통일경제, 자립적 경제건설모델을 주장하며 이런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의 성패는 노동자의 직접정치, 자주통일운동에 달려 있다고 끝맺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간 상이한 사회·

경제구조와 현격한 경제력 차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세계 경제와 다방면으로 통합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오직 남북통일경제만이 이 시대의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현 국면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이런 구상의 첫 단계가 되는 남북경제협력 정책조차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정경연계', 즉 북핵으로 인한 경제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정경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은 누구보다 남북경협 의지가 컸으나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북한도 2020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상징적 사건이 보여주듯 남북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면이며, 앞서 언급했듯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노선을 택했습니다. 설령 남북경협이 활발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북핵 문제가 심화하면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는 그 영향을 직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은 북핵인 셈입니다.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으로 가는 국가가 진보적입니까?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자"?

다음으로 권력세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혈통에 따른 북한 최고지도자의 승계는 북한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후계자론은 혈통승계를 정당화합니다. 이를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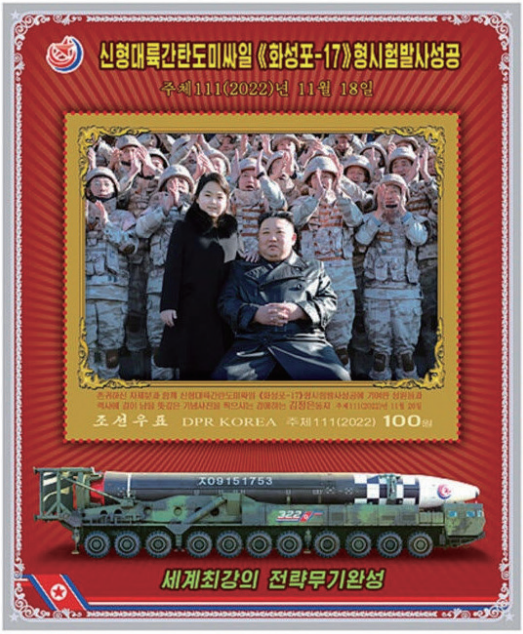
문화하는 것이 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즉 초헌법적인 최고규범인 '당의 유일적 령도(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1974년 김정일 부자세습을 준비하며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10대 원칙 제10조는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고 혈통승계를 규정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2013년 김정은 정권이 '원칙'을 개정하며 추가했는데, 정권 초기 취약한 정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혈통을 부각시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혈통이라는 점을 가지고 '세습제도'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돈과 권력을 극소수의 특정집단이 독점하는 사회에서는 '금수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북에서는 혈통이 같다는 사실은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 – 안호국 시사평론가, "차별화가 없는 정치", ≪민플러스≫, 2018.10.11.

위에 인용한 ≪민플러스≫ 글처럼, NL 일각은 북한은 남한과 다른 사회이므로 북한의 혈통승계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혈통을 통해 초유의 '3대 세습'으로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 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등은 입헌군주제 국가에서처럼 상징적인 지위를 맡은 것도 아니고, 북

한 체제의 핵심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핵무력법령으로 핵무기 사용 권한까지 오롯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3대 세습 정권에 권력을 집중시킨 북한 체제는 그 근간 자체가 부정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김일성 주석과 측근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그 아들, 손자가 물려받는 과정에서 대규모 숙청과 인권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탈냉전 거부와 핵무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한 업적이 없으며 북한 대중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당시 세계 최연소 국가지도자였던 만 27세 김정은이 정권을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는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사건(2013년), 이복



2023년 2월 14일 북한 조선우표사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하는 우표 도안. '존귀하신 자제'란 문구와 김주애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를 참관하는 사진을 담았다.

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2017년) 등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세습정치를 "북한은 지도자와 인민이 일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돌아가는 사회"(《민플러스》, 2020.06.13.)이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용어 소개

주체사상·수령론·후계자론이란? 김일성 1인 절대권력을 확고히 하고, 이를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하는 것을 정당화한 이론들입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명시하는데, 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근간이 1972년 북한 헌법에 명문화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간단히 말해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체"라는 주장이나, 핵심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수령론'과의 연결입니다. 심지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생명체의 뇌수가 각 기관을 조절하고 지휘하듯, 수령(김일성 주석)은 한 생명체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결합된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즉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 누가 수령을 하냐 했을 때, '후계자론'은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곧 "수령의 아들이자 곁에서 통치를 분담한 김정일보다 더 적합한 후계자가 누가 있겠냐"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4대 세습을 위해 남한과의 분리 정책을 취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정보·문화통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현재 북한 형법 제64조는 공화국 '존엄모독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종전 형법에는 없던 것으로 2022년에 생겼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제정된 '혁명사적사업법' 제3조는 김일성 일가의 유일영도체계 수립을 혁명사적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제2조는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을 명시합니다. 북한 법규에서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김정은이 명시된 것은 이 법이 처음으로 파악됩니다. 2022년 11월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발사 때는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고, 김주애는 이후 여러 차례 무기 시험, 열병식 등에 등장했으며 올해 2월 '김주애 우표'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권력세습과 이를 보증할 핵무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NL론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민족 모순', '분단 모순' 해소를 주장했고, NL 주류는 여전히 이러한 관점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진보연대는 "한미동맹의 가장 큰 문제는 민족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은 두 개의 국가이기 이전에 통일을 해야만 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규정합니다(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준), 『2021년 815 투쟁 자료집』).

그러나 앞서 보았듯 북한 당국이 같은 민족인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한에 대한 핵 공격 의사를 드러내는 상황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정작 북한에서는 세습정권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남한과도 구별되는 특수한 공동체로 형상화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개활동에서는 통일이나 민족 같은 용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조국', '국가'는 강조됩니다(서보혁, 「김정은 정권의 통일정책은 없다?」, 통일연구원, 2023.07.10.). 한 마디로, 현재 북한 당국은 '우리민족(한민족) 제일주의'보다 '우리국가(북한) 제일주의'를 더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국가 제일주의'는 김정은 정권에서 제창된 것으로, 국가, 국기, 국화, 국조 등 국가상징물의 중요성 강조 등을 통해 북한의 독자적인 '국가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남북통일이 북한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김정은 정권의 독자적인 통일 방안이 제시된 적 없다는 점과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새로운 통일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 대해 노골적인 핵 위협을 가하고, 2021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해체를 시사하고, 올해 7월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의향에 대해 남북관계가 아니라 제3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이 담화를 내는 것도, 남한과의 분리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이 '조선민족'(북한에서 한민족을 가리키는 말) 대신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을 강조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1995년에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주

장이 등장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을 잡은 후 첫 공개연설에서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어떠한 진보성은커녕, 현대 이전의 '왕조국가'를 연상시킵니다. ●

2023년 9월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5주년 기념 행사에 등장한 "우리국가 제일주의" 표어. [사진출처: ≪노동신문≫]

지금까지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NL 주류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북한 정권을 한반도 '민족해방'과 변혁의 지도세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제정세의 주요 지점인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적 경쟁, 대만 문제 등을 해석하는 데에도 북한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남한과 세계 시민의 민주주의, 평화와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사회운동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들의 국제정세 인식과 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
NL의
국제정세 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03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권이 장기통치를 위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되었고, UN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들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침략입니다. 러시아군의 침략과 폭력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은 정당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 속에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해서, 침략과 그에 맞선 항전이라는 이 전쟁의 기본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UN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들을 위배한 불법 침략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옹호해왔습니다. 침공 직후에는 푸틴 대통령이 밝힌 개전 근거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고, 3월 UN 긴급총회에서 북한은 세계 141개국이 찬성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단 5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군에 북한이 포탄 등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에 '보답'으로 첨단 미사일 기술을 전수할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올해 7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국방안전 분야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

- 북한 외무성, 2022.02.26.

"푸틴 대통령의 영도 아래 러시아 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안전,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실현에서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22.06.12.

"러시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대리전쟁을 더욱 확대하여 저들의 패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있다.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에 서 있을 것이다."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023.01.28.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교과서3은 처음부터 이 전쟁은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2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를 먼저 약화시키고자 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반러시아 유로마이단 혁명을 지원하면서 유도한 대리전이었다고 규정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제 당사자") "젤렌스키는 미국의 전쟁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올해 2월 8일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신냉전 대결과 다극화로 향하는 세계, 한반도 평화의 과제〉에서도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이 전쟁은 미국이 기획한 대리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패권이 몰락한 다극화된 세계는 인류사적 진보이고 호혜와 평등의 세계질서로 바뀐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침략 위협에 대응한 주권국가 최초의 반격전"이라고 규정했는데, 미국이 러시아의 반격전이자 자국의 패권을 몰락시킬 전쟁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푸틴은 왜 지금 침공을 감행했을까요?

이들의 주장은 나토의 동진(東進)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일으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개입된 전쟁을 겪고 있었고, 나토 헌장에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집단대응한다는 '자동개입'(5조) 조항이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나토를 이 전쟁에 직접 개입시키게 되므로, 2022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안이었습니다. 2021년 11월에도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해선 나토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지만 아직 나토 내 합의는 없다"고 말했듯, 단시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현실화할

가망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한 망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고대부터 러시아의 것"이었다는 믿음으로 이웃 나라를 전면 침공할 수 있는, 건드려서는 안 될 일종의 '미친 개'였다고 간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정권을 "서방에 맞서 호혜와 평등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세력으로 칭송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소위 현실주의적인 관점은 구시대적인 침략전쟁이 현실이 된 사태를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 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식의 설명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러시아가 '안보 우려' 때문에 침공을 했다고 이해해주어야 한다면, 러시아 인근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여 나토가 점차 동쪽으로 확대된 것도 이들이 러시아에 느낀 안보 우려 때문이니 마찬가지로 이해해주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중이 나토 가입을 지지하게 된 것 역시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크림반도 합병으로 안보 우려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들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랫동안 중립국 지위를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발트해가 '나토의 연못'이 되어버린, 러시아의 '안보 우려' 측면에서는 매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진전되지 않고 있던 당시 상

황을 고려하면, 푸틴에게 실제로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침공의 원인은 러시아의 국내적 요인에 있습니다. 즉, 푸틴은 권위주의적 통치와 긴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2014년 크림반도 점령에 나섰고 당시 지지율 상승을 맛보았습니다. 초장기집권을 위하여 이러한 시나리오를 되풀이하려는 욕망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푸틴 정권이 느꼈던 외부적 위협을 꼽자면, 그것은 나토의 확대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자국 정치에 개입하는 현실에 저항하여 민주적 체제를 구축하려는 주변국 민중의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택할 것"을 선언한 뒤, 국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강화로 나아가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항전이야말로 자주를 위한 민족해방투쟁

다음으로, 이 전쟁에서 가장 일차적인 사실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침공 이래로 약 일 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민중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리전일 따름이라는 입장들은 이것 또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의 전장으로 삼고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 탓에 전쟁이 길어져서 우크라이나의 피해만 커졌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 온 외국군의 공격으로 집과 일상과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이들, 그 이유로 "너희는 원래 러시아의 일부

였고 한 번도 제대로 실체를 갖춘 나라나 민족이었던 적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이들이 외국군을 자국에서 몰아내고자 싸우는 것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이게 "미국의 전쟁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라 할 일일까요?

소련 당시에도 우크라이나는 소련,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중 하나로 실존했고, 푸틴 본인이 인정했듯 민족국가의 지위와 형태, 소련에서 조건 없이 탈퇴할 권리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어 오로지 승강기 통로만이 남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한 건물 모습. [사진출처: UNITED24 텔레그램 채널]

지녔습니다. (푸틴은 이것이 레닌과 볼셰비키가 저지른 엄청난 과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직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으로 독립했고, 지난 30여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독립국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여전히 큰 데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있었고, 이것이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좌파는 유로마이단을 "야누코비치 정권과 같은 친러시아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체제, 친러시아 엘리트와 올리가르히를 통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반대하고 유럽으로의 통합을 지지한 민주적인 대중혁명"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점령과 살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백 년 간 지속된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사회진보연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세계의 미래②」, 《사회운동포커스》, 2022.12.21.).

그 어떤 가치보다도 '자주', '민족'을 중시하는 NL그룹들은 왜 러시아에 대한 항전을 '민족해방투쟁'으로 여기며 "우리 땅에서 외국군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일까요? 민족자주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는 세력이, 레닌이 "민족자결주의를 수용하여 러시아 제국의 변두리들에 너무나 후한 선물을 주었다"고 비난하며, 사회주의 혁명이 무너뜨린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되찾겠다고 하는 푸틴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책임 있는 사회운동 세

력으로서 스스로 내건 가치나 구체적인 현실 분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이익에 복무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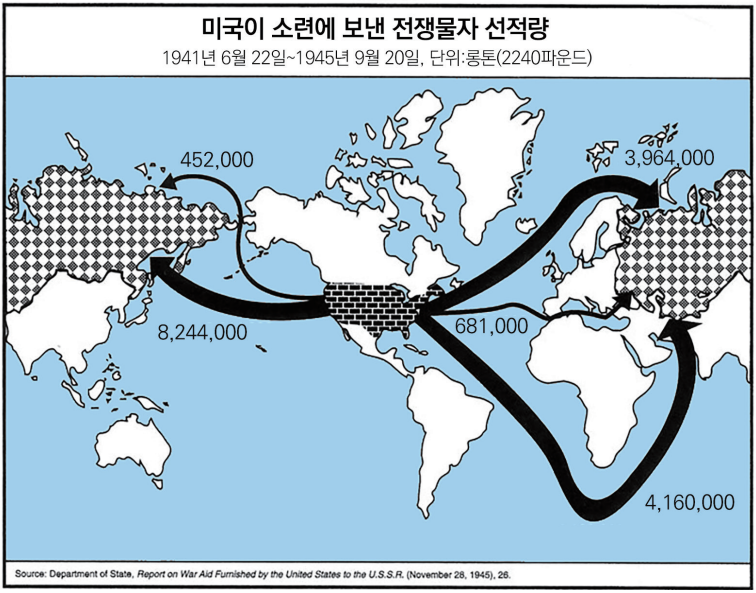
미국이 돕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이 의미 없습니까?

NL 그룹들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방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무기는 거의 대부분 서방이 지원한 것이고, 이러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이렇게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단순히 희생되고 있거나 서방의 이해를 대변하고만 있다는 증거일 수 있을까요?

무기는 외국 무기더라도, 지금까지 전투를 수행한 주체는 외국군이 아니라 수많은 자원병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군입니다. 모든 전투가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 쓰인 모든 불발탄과 지뢰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민중의 항전 의지는 여전히 명확합니다. 여론조사들을 보면 영토 상당 부분을 수복할 때까지 항전을 지속해야만 하며, 그래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민중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주체이며, 자신의 명확한 이해관계에 따라 항복 대신 항전을 택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누구보다 이들이 잘 알겠지요. 그럼에도 이들이 항전을 택했다는 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전쟁에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 어떠한 타협을 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는 우크라이나 민중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서방이 지원한다는 사실이, 침략에 맞선 저항의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본질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 대한 미국, 영국의 대대적인 군사적, 물질적 지원은 소련의 반격과 나치 독일의 패배에 한몫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이러한 지원을 반겼고, 미국 좌파는 미국 정부가 독일에 침략당한 소련에 무기를 보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항전은 순수한 민족적 저항일 수 없다는 주장은 피침략국 민중이 군사력에서 우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켜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들에 전쟁 물자를 지원했다. [인포그래픽 출처: 미국 국무부 / 한국어 번역, 편집: 사회진보연대]

있는 침략군의 학살과 파괴를 참든지, 맨손으로 어떻게든 맞서든지, 항복하든지 선택하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국제정치는 물론 선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해서 '대리전'이라고 부른다면 사실상 세상의 거의 모든 전쟁을 대리전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사안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 것은 당연히 조선 민중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패전국 일본의 힘을 꺾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결국 승전국의 식민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식민지가 해방된 것도, 그것이 식민지 쟁탈 전쟁과 민족해방투쟁의 분출을 제어하면서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더 안전한 질서라는 것에 강대국들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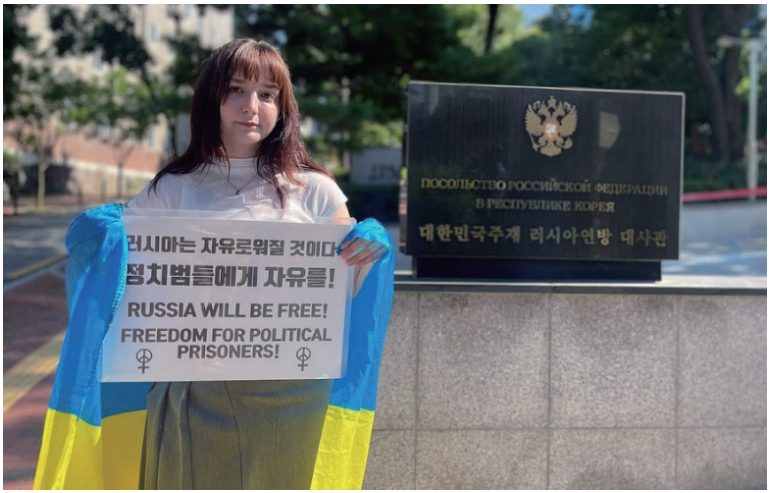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독립을 하면 안 됐을까요?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과 같은 사회주의 세력이 아니라면 조선 독립 투쟁에서 연대를 하면 안 됐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 내 한인 공동체의 독립운동 역사 등을 우리가 전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듯,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어떤 세력이 이들을 지원하냐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서방의 의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필요하면 비판하는 것과, 국제민중연대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핵심을 러시아와 서방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은 우크라이나 민중의 이해를 서방과 젤렌스키 정부의 이해

로만 치환하고,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하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극도의 '미국중심주의'라고 비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

"이 전쟁을 러시아와 서방의 대리전으로 보는 이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다른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도전받고 있고 그런 시도들이 진보적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중심적 인식이고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견해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만들어 내고 다른 이들의 주체성은 없다는 주장은, 국제주의를 지정학으로 대체하고 민중의 견해를 단순히 국가의 견해로 대체합니다. 좌파라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진영주의적 견해, 역설적으로 더욱 더 미국 중심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민중의 해방이라는 관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 2022년 노동운동포럼 화상강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사회운동의 과제"에서 우크라이나 좌파단체 '사회운동'(SR) 활동가 블라디슬라프 스타로두브체프의 발언, 2022.12.10. (사진출처: 사회진보연대)



"제임스 베이커와 조지 W. 부시가 고르바초프에게 했던 구두 약속 때문에, 다른 주권국가들이 자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쟁의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미국중심주의가 아닙니까?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운명을 체스판 위의 볼모로 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동하여 러시아와 싸우고 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빼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유로마이단이 발생했다는 태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대량학살의 역사, 문화적 억압,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거부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권을 떠나기 원했을 가능성을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FAR) 한국 모임 활동가 알렉산드라, "우리의 비판과 항의, 반미-친러시아 진영 논리", 《레디앙》, 2022.12.14. (사진출처: 재한 러시아인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04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일까요?

모든 국가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지키는 것이 UN의 원칙이므로, 침략을 당한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일이며 결코 우리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한 '오지랖'이나 미국의 압박에 의한 '굴욕외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대국중심질서보다는,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하여 크든 작든 모든 국가의 평등과 자유를 명시한 전후 세계질서를 지키는 것이 인류의 실리에 부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한 데 대해,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 주요 민중운동진영 단위도 이러한 행보는 '국익'에 반하는 외교적 참사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과 인접한 러시아와 중국"(전국민중행동)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얻을 실리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중국 대 우크라이나의 객관적인 국력이나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 교역 규모 등은 누가 봐도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이 현실이므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의 명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별개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표현대로, 각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실리와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모든 국가의 평등-자유를 명시한 전후 세계질서가 러시아, 중국의 대국중심질서보다 인류의 실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실리와 이익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합 8천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은,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둔 UN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UN헌장은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大小)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소 각국의 평등권'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계대전은 자본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확보 경쟁이라는 팽창주의로 나아가다 보니 필연적으로 일어난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유의 '세계전쟁'이 두 차례나 일어났고, 또 식민지배와 수탈 속에서 세계의 수많은 민중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민족자결권 요구와 민족해방운동의 물결 덕분에 종전 이후 대부분 식민지가 해방되었습니다. 전후 세계질서에서 각국의 주권과 안보는 본질적으로 그 나라만의 사안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인구 몇 만에 지나지 않는 작

은 나라들도 주권과 평화를 누리는 세계, 크든 작든 과거에 식민지였든 아니든 모든 국가가 명목상으로 동등한 1표를 가지는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가 영구 상임이사국인 UN 안보리의 존재는 예외입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대국이 표면적으로나마 무력이 아니라 규칙을 사용하도록 했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유럽에서 패전국 독일을 안정적으로 유럽연합으로 끌어들이면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불완전하나마 핵무기의 확산을 막았던 것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힘입니다.

이러한 평등과 자유는 단순히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으므로, UN 헌장은 이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바로 이러한 UN헌장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침략 전쟁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이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대신 공동으로 대처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임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141개국)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UN총회 결의안에 동참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원칙대로라면 UN의 집단안보 시스템이 발동했어야 할 사안이나, 침략의 주체인 러시아와 이를 옹호하는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현실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것에 가깝습니다.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이탈 행동이나 '외교적 실수'

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원래 갔어야 할 경로로 가려는 노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평화와 자유가 인류의 이익입니다

> 한미정상회담은 '신냉전을 강화하는 반평화' 회담이었다. (중략)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 반러시아 태도도 분명히 하는 양상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이 반중, 반러 대결에 앞장서게 되었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으로 한국은 경제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다.
>
> - 진보당,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절대 안된다!", 2023.02.03.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며, 이 사안이 심각한 분쟁 사안으로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
> 한국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동시에 전쟁이 잠시 멈춰진 휴전국가다. 우리 국민의 평화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을 적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또다른 전쟁위협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 - 겨레하나,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하라!", 2023.04.20.

진보당, 겨레하나 등의 NL그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긁어 부스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그저 한국에서 7500km 떨어진 먼 나

라의 일이 아니라, 향후 세계를 뒤흔들 사안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 파급력은 가히 세계사적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국경과 현상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의 성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붕괴를 가속하고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팽창주의 세력에 비슷한 군사적 모험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서방세력의 군비증강도 훨씬 더 큰 규모로 각국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이뤄지기 쉬우며, 평화운동이 군축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듯, 전후 국제질서는 온전히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이 지지해야 하는 방향은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지, 현존 질서가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것 그 자체일 수 없습니다. 대안 없는 붕괴는 세계가 공통된 규범 없이, 힘과 힘이 맞붙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민플러스》, 통일시대연구원 등은 현존 세계질서가 흔들리는 틈을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메울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홍콩보안법과 신장위구르 강제노동수용소, '제로코로나' 봉쇄 정책, 한국·호주·베트남·필리핀 등에 대한 경제보복을 보면서도 이들이 "인류사적 진보, 호혜와 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끌 것이라 믿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주장하는 '다극체제' 구상을 한 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핵심은 세계를 각 지역 강대국 관할 하의 여러 지역으로 나누는 '세력권 분할'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하나의 세계'(단일세계주의)를 지향하며 UN을 창설하고 미국과 소련, 중국이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은 전후 세계질서에 역행합니다. 이러한 전후 세계질서는 단순히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전후 세계질서는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소련 스탈린 서기장이 합의한 '얄타구상'에서 비롯하여 '얄타체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소련은 전후 국제질서를 대표하는 UN과 NPT의 확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은 종전 직후 출범한 UN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았고, NPT 또한 1968년 3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안'을 UN총회에 회부한 뒤 UN 안보리 결의안으로 성립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2월, 독일 점령과 전후 세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얄타에 모여 앉은 영국 처칠 수상(왼쪽)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가운데), 소련 스탈린 서기장(오른쪽). 뒤에는 세 나라의 장성들이 서 있다.

그러나 소련이 주역을 맡아 확립한 전후 국제질서를,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오늘날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발표한 새 '대외정책개념'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세계를 9개 지역으로 나누고, 구소련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근외' 개념을 부활시켜 구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의 일극주의에서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로 재편하자는 구상으로,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관할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구상 속에서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미래는 과거처럼 중국의 '천하'에 종속하는 것일 공산이 큽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 정권이 자국이 '제국'이던 시절의 역사를 회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순간부터 이미 대만과 한반도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시진핑 중국 주석은 3연임을 확정하며 대만과의 "통일 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2022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의 규탄과 추가 제재를 지속적으로 막았습니다. 북한은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법을 만들고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전술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침공과 핵 위협,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

며 인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패배하고 대만이 중국군에 점령당한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척에 있는 우리가 이전과 다름없이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러시아와 중국이 하고자 하는 바에 참견하지만 않으면 별일 없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의 행태를 묵과하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한편, 한국 경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현실이며, 그러니 대중, 대러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조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화나게 하면 국익에 위배된다"는 식으로만 해석하는 태도는 근시안적입니다. 전후 세계질서와 그 일부인 '규칙 기반' 국제무역은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반도, 대만 섬과 같은 지역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탓에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직접적인 이권 침탈과 식민지 쟁탈전의 장이 되었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는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2001년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광활한 세계 시장에 대한 중국 상품의 수출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세계 사회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위선을 비판했듯, WTO가 상징하는 자유무역 체제의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대책 없이 WTO 체제를

무너뜨리는 요소들,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나 중국의 '한한령' 등 경제보복이 대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국제무역 규칙 위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곡물 수출 봉쇄, '자원 무기화'와 같은 행태는 인류 모두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를 그저 묵과하는 것이 과연 한국과 세계 경제에 장기적 이익일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을 반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시되었으므로, 사회운동의 대응은 침략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규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운동에서 이러한 활동은 처참할 정도로 과소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원인이라는 왜곡된 묘사가, 침략전쟁에 대한 원칙적 반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민플러스》 등은 침략국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세계를 넘어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나라로, 대러시아 제재를 우회하여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나라들을 미국의 대러 포위 압박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들로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평화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진보당이나("미국의 비위를 맞추겠다고 소중한 '평화 원칙'을 허물겠다는 건가!", 2023.04.19.)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촛불집회("불법도청 주권침해 미국 사죄 받아내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굴욕적 한미동맹, 윤석열 규

탄 촛불") 등을 보면 마치 이러한 대응을 과거 한국 사회운동의 이라크 파병 규탄 행동과 같은 맥락에 두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은 침략 지원이었던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침략에 맞서는 항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구도를 의도적으로 뒤섞는 것은 결국 누가 침략국 편이고 누가 피침략국 편이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미국을 규탄하자"는 진영논리입니다.

사회운동은 친서방과 반서방의 구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진영논리를 따르는 대신,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구분하여 피침략국 민중의 권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침략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민중과 어떠한 연대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은 2023년 2월 24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규탄 세계시민 평화촛불집회>. [사진 출처: 사회진보연대]

05

미국이 신냉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등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신냉전을 조장하고 공급사슬을 분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위협하여 갈등이 고조되는 정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상하는 중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이것이 통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사슬 분리 역시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초법적인 기술 탈취 문제에서 비롯했습니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민플러스》 등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공급사슬 디커플링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냉전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위협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정세입니다.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경제는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그 대신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공격적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위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국유기업 지원과 해외 기술탈취로 이어져 극심한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권위주의

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이를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 질서를 거부하려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경쟁"은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진단 아래 제시된 대응책입니다.

권위주의와 민족주의를 강화한 중국과 러시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가 뚜렷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나라든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신화에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미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고, 이를 기존의 경제정책으로 대처할 수 없는 '뉴노멀'(New Normal)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제 전망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위기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화가 초래한 불평등으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민주의적 정치인이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했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정세를 NL 주류는 '다극화'로 규정합니다. 미국 일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패권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플러스》는 지금이 다극화의 시대이자 신냉전의 시대라고 설명합니다(이정훈 편집기획위원, "중국의 고단수 외교와 한국의 하수 정치(1)", 2023.06.26.). 신냉전은 "지는 해 미국이 순리적 후퇴를 거

부하며, 이 추세를 뒤집으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무리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무리수는 "대만의 분리 독립 문제 등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내세워 대만을 자극하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포위 봉쇄하고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를 자극하며 적대전선의 세계체제(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다른 질서를 형성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도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두 번째 경제 대국 지위에 오른 것은 2009년이다. 그리고 2030년경 미국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며, 전쟁을 통해 패권을 유지해온 미국은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쇠퇴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떠오르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신냉전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 견제 방법은 전쟁을 유도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고립과 군사적 패배를 노리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경제는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 발굴에 실패하면 경제 하강은 더욱 빨라지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데, 정부 주도의 기술혁신은 성공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경제에는 거대한 파급력이 예상되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거품이 중국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도 커져서입니다. 2021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그룹의 파산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휘청였는데, 올해 다시 헝다그룹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 완다그룹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수출입, 제조업 지표도 부진하고 청년실업률은 20%가 넘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한때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였던(현재 5위)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최초로 달러 채권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인포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경제성장 둔화는 중국정치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중국공산당은 고속성장을 강력한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왔는데, 성장이 감속하면 대중의 불만이 정부를 향할 수 있어서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2021년 11월 제3차 역사결의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시진핑 동지의 핵심 지위를 확립한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추진에 결정적인 의미"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려면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권위주의는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관례를 깨고 3연임을 강행하면서 권력 장악을 공고히 했고, 시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 사흘 전인 2022년 10월 13일, 베이징 교통 중심지인 시퉁대교에 현수막 2장이 내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코로나19 PCR 검사 대신 밥을, 봉쇄 대신 자유를,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영수(우두머리) 대신 투표권을, 노예 대신 공민(公民)을",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였다. 이 구호들은 한 달 뒤 시작된 중국 각지와 세계 곳곳의 '백지시위'에서 자주 등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공격적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부상했습니다. 이를 본 대만 시민들은 중국과 통일하면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중국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2019년~2020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 홍콩보안법을 도입한 과정은 대만 내에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정권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대만 통일'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고립과 군사적 패배를 노려 대만 침공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8월 14일, 홍콩 경찰이 송환법 반대 시위대에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법이 반체제인사와 사회운동 탄압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 최장 기간의 시위를 펼쳤다. [사진출처: ≪로이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침체하자 푸틴은 경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저항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대(大)러시아 애국주의'를 한층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러시아 애국주의는 과거 소련의 영토에 속했던 독립국들을 향한 팽창 의지로 노골화했습니다. 한편 권위주의를 강화한 푸틴 정권은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의 민주화 운동, 탈권위주의적 흐름이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까 경계했습니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운동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실현하는 최적의 케이스라고 판단하고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으로 푸틴의 지지율은 급격히 치솟았고, 푸틴은 2020년 개헌을 통해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해석은 러시아 내부의 변화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귀결된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면죄부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중국과 공급사슬을 분리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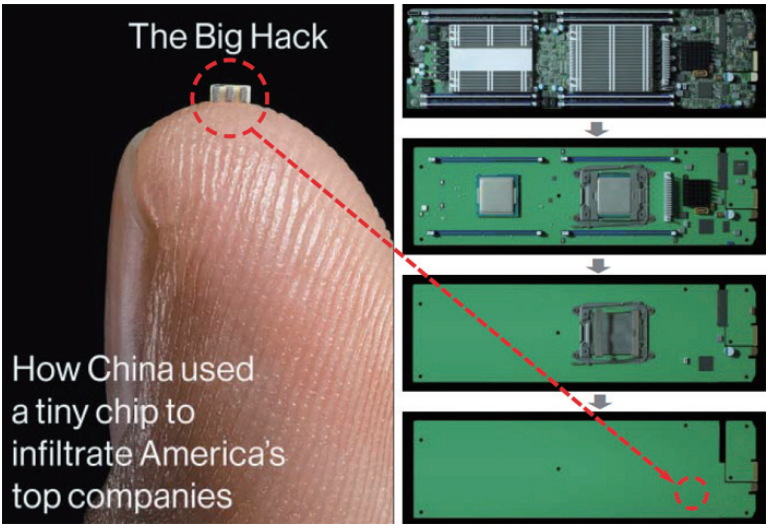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리라 전망하는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포위망을 좁힌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미국이 공급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적자 국가입니다. 특허와 저작권에 있어 중국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큰 비용을 외국에 지불합니다. 반면 미국은 지식재산권 부문에서 압도적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38%가 지식재산권, 기술독점 수입에서 발생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는 상황은 아직까진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미국이 공급사슬에서 중국을 분리하려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기술혁신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해외 기업들에 불공정한 기술이전을 강요해서입니다. 중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기술개발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중국은 해외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전략을 정부 주도로 취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중국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투자 허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들이 첨단기술 획득을 목표로 미국 기업 및 자산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파견한 스파이가 특정 기술을 노리고 외국 기업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례나, 외국 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핵심적인 영업 비밀을 도용해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사례도 다수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인을 상대로 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급증했고,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중국 당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보호관세로 대응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글로벌 공급사슬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미

국의 공급사슬 분리는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주됩니다.

물론 사회운동의 관점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주도해 구축한 현재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가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막는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대안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중국 또한 선진국에서 빼낸 기술로 발전시킨 자국 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철저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특허권이라는 기존 규칙을 깨고 미국이나 유럽 기업의 첨단기술을 빼내서



2018년 10월 4일,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중국이 수년간에 걸쳐 마더보드에 감시용 칩을 심는 방식으로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주요 IT기업의 기밀을 수집했다"며 좁쌀만한 마이크로칩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자국기업에 넘겨주고 있지만,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사회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반대를 무조건 옹호하는 사고 틀에서 벗어날 필요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전쟁을 유도하고 공급사슬 디커플링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냉전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위협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정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제시된 미국의 '전략적 경쟁'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한다기보다, 이들의 권위주의와 공격적 대외정책에 대응한다는 문제의식에 가깝습니다.

전략적 경쟁을 냉전에 유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긴밀히 상호 연결된 가운데,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된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적 교류가 막힌 봉쇄정책을 기본으로 했던 과거의 냉전과는 다릅니다. 미국 경제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중국의 미국 국채 구입으로 메꾸는 '달러 환류'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은 이 메커니즘을 지탱하는 핵심국가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도 무역단절이 아니라, 중국에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준수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즉, 전략적 경쟁은 갈수록 원심력이 커지는 중국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다시 포섭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사회운동의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위선적으로 활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대만 침공 위협처럼 '무력으로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질서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자본주의와 권위주의도 미국 자본주의 모델의 대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미국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는 반제국주의 진영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유로 현존 질서를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한다면,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신 오히려 자유주의에도 미달하는 퇴행의 길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은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평등,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며 강대국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고,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안적 국제질서를 모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06

대만 위기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일까요?

대만 위기는 중국공산당이 권위주의적 통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대만 통일'을 제기하면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대만 시민들의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는 '내정간섭'이 아니라 주권적 실체를 가진 대만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불러올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중국은 시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을 탄압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대만 시민들은 대만의 민주적 정치체제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중국의 강압적 태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호응했습니다. 대만 시민에게는 통일 여부와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무력을 동원한 대만 통일' 시도를 비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일 수 없습니다.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대만 문제 부상

《민플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냉전 전략이 대만을 자극하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포위 봉쇄했고, 그것이 대만 위기로 구체화했다

고 주장합니다(이정훈 편집기획위원, 앞의 글, 2023.06.26.).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도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결행한 것은 대만을 제2의 우크라이나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려고 대만 문제를 트집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돌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권위주의 강화에 눈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중국이 민족부흥의 역사적 과업으로 "대만 통일"을 격상시킨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해서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의 고속성장을 강력한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왔으나, 성장 감속 국면에 진입하자 민족주의와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대만이 중국 핵심이익 중에서 핵심인데요, 이유는 민족주의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영토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제3차 역사결의에서 중국은 현대사를 두 개의 100년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100년은 '굴욕과 분투의 100년'이고 앞으로의 100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에 따라 중국은 굴욕의 식민주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아편전쟁으로 빼앗긴 홍콩과 청일전쟁으로 빼앗긴 대만을 수복하는 것을 '중국몽(중국의 꿈)'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과 시진핑은 권력집중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비판적 논의를 봉쇄하고 디

2017년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시진핑 주석.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을 뒷받침하는 것은 중국군을 세계 최강 군대로 육성하겠다는 '강군몽'으로, 시 주석은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한 다음 2035년까지 군사이론, 군대조직, 군사인력,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205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출처: ≪AP≫]

지털 감시 기술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홍콩 시민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수반인 행정장관을 직접 선출하겠다며 시위에 나서자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이때 최루액, 살수차를 동원한 경찰의 진압을 시민들이 우산으로 막아내 '우산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2019년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제정을 강행하여 홍콩 시민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행정구역이지만 민주적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한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이 허울 좋은 말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대만에서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려는 '해바라기 운

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확고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홍콩 탄압을 지켜보던 대만 시민들은 홍콩이 대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을 총통으로 선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2020년 재선에도 성공했는데요,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거부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탈중국화' 기조가 시민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거리두기를 표방하는 차이잉원 정부가 등장하자 중국은 반대 의사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대만의 탈권위주의 흐름을 차단하지 못하면 이것이 대만을 넘어 중국 본토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첨단기술 경쟁

2014년 3월 18일, 마잉주 국민당 정부가 추진한 대만-중국 '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 비준을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대가 대만 입법원(국회) 건물을 점거한 모습. 이 일을 계기로 일어난 '해바라기 운동'(318운동)은 21세기 대만에서 가장 큰 학생운동이었고, 이후 대만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출처: ≪AFP≫]

속에서 대만은 독보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대만해협 장악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대만 통일은 시진핑 장기집권의 명분이기에 사활적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중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대만해협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하며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마찰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만 문제를 다루던 미국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하여 점차 대만 문제가 미중 간의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내정간섭이 아니라 대만 시민의 권리

《민플러스》는 "민진당의 독립지향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양안관계 위기가 본격화"되었다며, "주권국가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이 진보적이며, 무엇이 퇴행적인가 하는 점을 미국의 간섭문제와 연동하여 보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로, 내부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민플러스 데스크 칼럼] 대만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 2021.11.04.). 대만 시민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며, 미국을 비롯한 제3국의 관여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가 첨예해진 이유는 대만 시민들이 중국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을 지지하지 않아서입니다. 즉, 미국이 종용해서 대만 시민들이 중국에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중국이 권위주의적 통

치를 강화해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공식화하기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19년에도 이미 여론조사에서 대만 시민 88.7%가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방식으로 내세운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대만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는 대만인 절대 다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대만을 병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88.1%가 중국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등 군사적 압박에 반대했고, 85.3%는 '일국양제' 통일에 반대했고, 86.2%는 대만해협 현상(현재 상태) 유지를 지지했으며, 83.7%는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대만 여권(왼쪽)과 2021년부터 사용된 현재 대만 여권(오른쪽). '중화민국'의 영문 표기인 'REPUBLIC OF CHINA' 표기를 국장을 감싸는 방식으로 매우 작게 바꾼 대신 'TAIWAN'(대만) 표기의 크기를 키웠다.

[돈바스 지역] 도네쯔끄 인민공화국과 루한스끄 인민공화국의 분리독립은 미국이 관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자진하여 종속되려는 우크라이나 우익정권의 책동을 거부한 것이고, 대만의 분리독립음모는 미국이 관리하는 인도-태평양군사동맹에 자진하여 종속되려는 대만 우익정권의 책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반미세력이 실현한 분리독립과 중국 대만에서 종미세력이 추구하는 분리독립 사이에는 형식적 유사성만 존재할 뿐, 본질적 측면은 전혀 다르다. 분리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분리독립을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젤렌스끼 정권의 궤멸, 종미하면 망한다는 피의 교훈", 《자주시보》, 2022.02.28.

《자주시보》도 대만 시민들의 선택을 폄훼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자주성도, 자기결정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통일 여부와 방식에 관한 선택,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에 관한 선택은 대만 시민의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지원 여부가 '자주성'의 정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군부독재에 맞선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미국의 지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민의 민주화 염원 자체가 정당한 권리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대만 시민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판단한다면, 홍콩 민주화를 위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권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미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시민들의 권리도, 탈레반의 인권탄압에 저항

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미국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됩니다. 보편적 시민의 권리와 인권보다 반미(反美)를 우선하면, 이처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눈감는 '퇴행적'인 입장으로 귀결됩니다.

국제사회가 대만 시민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닙니다. 자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자를 규탄하거나 제재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중국과 별개의 주권적 실체가 있는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말하는 '힘에 의한 대만의 현상변경 반대'란,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만의 미래에 관해서 대만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강대국인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대만 문제에 침묵한다면,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만 시민들의 염원을 중국이 군사력으로 짓밟는 것을 용인하는 셈입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 위협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도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핵무장을 한 북한이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해 남한을 대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물론 전 세계 사회운동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반대해야 하며, 남한 사회와

사회운동은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당은 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에서 '힘에 의한 대만의 현상변경 반대'를 명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반(反)중국노선"을 확고히 한 것이라, 향후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은 경제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신냉전 반평화 굴종외교로 얼룩진 한미정상회담", 2023.04.27.). 전국민중행동 성명(2023.04.27.)도 한국정부가 대만 문제를 언급하여 "중국을 적국으로 돌렸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동아시아 전쟁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식적으로 전쟁을 저지하려면 중국의 무력행동 의지에 경고를 보내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진보세력이라면, 중국에 대만 시민을 향해 미사일과 포탄을 쏟아 붓지 말라고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진보당, 전국민중행동 등의 성명은 한국이 대만 편을 들면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평화와 인권 문제에 눈 감자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무력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 오히려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상식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에 대한 대만의 반감은 미국이 부추겼으니 정당하지 않은 반면, 중국에 경고를 보내는 행동은 대만 통일을 방해하는 내정간섭이니 외세에 맞선 중국의 자위권 행사는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포화에 휩싸이게 하더라도 미국이 유도한 일이니 정당방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만 시민들의 중국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미국

의 사주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중국이 대만과 정말로 '통일'하고 싶다면 대만을 총칼로 위협하는 대신 홍콩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자국민 감시와 통제를 중단하며 대만 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운동은 대만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하고, 동아시아 전쟁으로 번질 것이 자명한 중국의 대만침공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

07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극체제가 국제질서의 대안일까요?

NL 일각의 찬사 섞인 평가와 달리, 중국, 러시아의 정치,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보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러시아 정권의 폭력, 인권탄압 행태를 단지 '반서방국가'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못 본 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지지하는 대신, 이들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홍콩, 이란 등지의 민중이 벌이는 투쟁에 주목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회운동이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현재 세계정세는 세계적 전쟁위험과 대안의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의 부상을 양대 특징으로 하는 인류사적 대전환기다. 미국의 일극체제에 맞서는 나라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결집해 브릭스11을 탄생시켜 대안의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권국가들의 평등과 호혜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무력충돌과 경제대결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

-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세계적 전쟁위기. 피어나는 다극화 세계질서", 《통일시대》, 2023.09.05.

다극체제 전환 진영은 공고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푸틴의 지지율은 60%대에서 80%대로 치솟았다. 러시아 국민 72%가 전쟁을 지지한다. 루블화의 가치 역시 (2022년) 3월엔 달러당 143루블까지 떨어졌으나 8월 1일 현재는 달러당 61루블로 치솟았다. 루블(ruble)이 '돌무더기(rubble)'가 되었다고 바

이든은 비웃었으나 돌무더기가 된 것은 달러였다.

- 2022년 민주노총×겨레하나 노동자 통일교과서3『패권의 종말과 대전환, 우리 노동자는』

오늘 정세는 무엇을 뜻하나? 첫째, 조선(북한), 중국, 러시아로 대표되는 지구촌의 세 '반제자주핵전략국가'가 '전략적 연대협력관계'를 유지, 강화, 심화시키고 있는 정세를 뜻한다. 둘째, 위 세 핵전략강국을 중심으로 근본에서 반제자주적인 주로 이란, 시리아, 예멘,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같은 제3 세계 반제자주성향국가들이 조중러 세 반제자주핵전략국가의 지원, 엄호 하에 슬기롭게 상호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세를 뜻한다. 셋째, "나토/유럽연합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는" 정세를 뜻한다.

- 정기열 21세기연구원 원장, "21세기 다극협력시대 반제자주원칙: 상호존중, 평화공존, 공동번영", ≪민플러스≫, 2021.09.28.

위와 같이 여러 NL 그룹은 미국 혼자 주도하는 현재의 세계('일극체제')와 달리 여러 국가가 주도권을 나눠 가지는 다극화(多極化, multipolar)된 세계는 더 진보적이고 평등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이러한 다극화를 주도하는 반서방, 반제국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다극주도 세력의 힘은 커지는 반면 미국과 서방의 패권은 몰락하는 '전환기'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다극지향진영과 함께 하는 것이 가치상으로도, 대세에도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감시?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미국에게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가장 큰 도전국이다. 중국 역시 미국 질서를 거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서구식 가치와 규범만을 강조한다며, 비서구 국가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중국식 가치와 규범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질서를 거부하는 중국이 제시하는 대안을 살펴봅시다. 최근 중국은 자국의 민주주의는 ‘인민 민주’, 서구의 민주주의는 ‘선거 민주’라고 구분하며, 서구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돈을 가진 이들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제도는 돈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의 민주주의 양식이 천편일률적일 수 없으니 중국은 중국에 맞는 길을 가겠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의 실체는 권위주의의 강화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민에 대한 감시, 억압, 조작, 검열, 정치적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봅시다. 2022년 7월 중국 허난성에서 지방은행 4곳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은행에 돈을 맡긴 전국의 예금자 수천 명이 몰려와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금주의 항의와 요구가 계속되자 허난성 당국은 1317명의 ‘코로나 건강 코드’를 격리 대상을 뜻하는 ‘적색’으로 조작했습니다. 은행에 항의하러 오지 못하도록 집회 참가자들의

외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시민에 대한 보상 및 처벌 기제로서 '사회신용시스템' 제도를 활용하여, 오직 통치에 순종적인 시민만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신용시스템'이란 정부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개인의 신용 및 금융 정보, 범죄 이력이나 사회활동 등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점수를 대출, 교육, 의료 보장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사회신용점수가 낮은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속철도나 비행기 탑승, 고급 숙박시설 이용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고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권위주의적 통제모델은 중동, 아프리카,

2019년 5월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디지털 전시회에서 안면인식 장비가 방문객들의 나이·성별·머리 모양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습. 2017년 중국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당국은 주요 도시 교차로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면 스크린에 보행자 얼굴과 집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뜨도록 했다. 중국에 설치된 안면인식 카메라는 2017년 1억7,600만 대에서 2020년 6억2,600만 대로 급증했다. [사진출처: ≪로이터≫]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 정권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일 뿐,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을 대체할 새로운 보편성을 제시하는 대신, 자유주의 이념에 미달하는 권위주의적 통제모델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중국의 행태는 세계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제3세계의 빚의 덫과 적자로 귀결된 "일대일로"

또한 중국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일대일로'(하나의 띠, 하나의 길)를 평가해 봅시다. 일대일로는 기존의 서구 중심 국제개발기구들이 불공정하여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던 신흥국가들에, 중국이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새로운 발전양식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추진되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개발자금을 제공하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로가 대안적 발전양식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은 부채상환을 위해 영토와 시설물, 천연자원에 대한 이권을 중국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높은 이자로,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개발자금을 빌려준 탓입니다. 예를 들어 라오스 역사상 최대 공공사업이자 중국 일대일로 사업인 라오스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라오스는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관 35억 4,000만 달러를 도입했습

니다. 이는 라오스 GDP의 1/3에 해당합니다(김미림,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공식 개통의 의미와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2.14.). 캄보디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대외채무의 절반이 대중국 채무로 추정됩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중국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금광, 발전소 등 국가 이권을 넘겼습니다. 중국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국가가 자신의 항구 시설에 관한 권한을 중국에 양도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2015년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43년 간 조차하기로 했고, 2016년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을 35년간 관리하고 운영할 권리를 획득했으며, 2017년에는 스

2022년 7월 9일,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점거한 모습.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날 밤 퇴임을 발표했다. '70년 만의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스리랑카는 같은 해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 해 말까지 스리랑카가 갚아야 하는 대외부채는 70억 달러(8조 7990억원), 향후 5년간 상환해야 할 대외부채는 250억 달러(31조 4250억원)이었다. 이중 약 20%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생긴 것으로, 대외부채 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이 겹쳐 경제난과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리랑카 함반토타 항을 99년 동안 조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생각했던 경제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중국 기업이 공사를 수주하고 원자재와 노동력 역시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일대일로 사업 융자 제공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따라서 일대일로 참여국 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도 않고 원자재 판매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부채의 굴레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서구가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방식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대일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강제노동수용소를 묵과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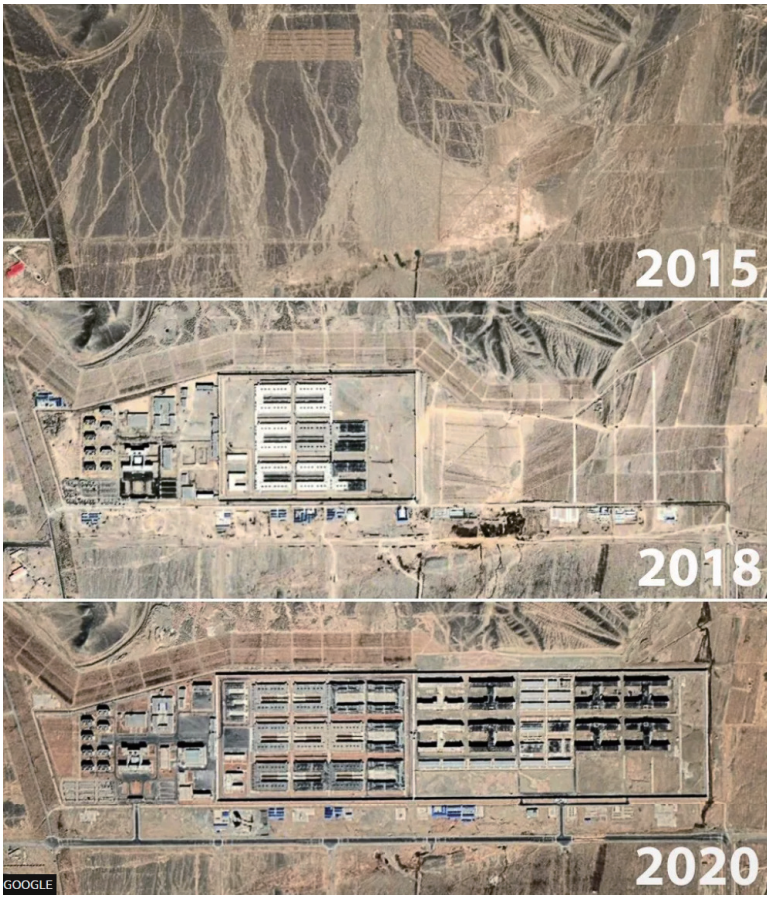
중국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장밋빛 전망들의 실상은 위와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 문제도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노동'과 '인종탄압'이라는 매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상징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수용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의 공식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평균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소수민족 강제노동수용소를 운영하는 중국을 과연 우리가 세계질서를 이끄는 국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UN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발간했듯, 신장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는 UN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밝혀

졌습니다. 강제노동수용소의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드러나고,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위구르인 100만여 명이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하자, 강제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중국 정부는 2020년, 연평균 노동자 약 129만 명에게 '재교육 시설'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했다고 마지못해 밝혔습니다. 테러와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의 전파를 막고 빈곤 퇴치와 노동구조 개선을 위해 표준 중국어, 기술 교육 등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간 모든 제기가 '일부 개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서방의 악의적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인 중국 정부의 대응이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2022년 5월 영국 BBC 등 14개 언론사는 중국 공안(경찰)의 신장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감자들의 수감 사유 대부분은 사실상 무슬림 소수민족이라는 이유였으며, 수용시설에는 모든 지역에 무장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탈출을 시도하는 수감자는 사살한다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중국 당국의 내부 문건을 통해 강제수용소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습니다.

신장 지역에서의 강제노동은 인민과 체제의 적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 정치경찰이 관할하는 강제수용소를 통한 교화와 재교육, 강제노동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과거 소련의 '굴라크(정치범수용소) 체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의 소련과 달리 중국은 세계경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전 세계로 보내지므로, 신장 강제노동 문제는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착취와도 결부됩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 다반청구 내 수용소부지의 2015년, 2018년, 2020년 모습을 비교한 사진. ≪AP≫는 2021년 7월 22일 서방 언론 가운데 최초로 이 수용소에 출입을 허용받아, 실태를 취재하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7m 높이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있는 다반청 수용소는 26만 9318평에 달하며 1만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다. 위구르인 수감자들은 감방 한쪽 구석에 일렬로 앉아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알리는 영상을 시청한다. 통제실 직원들은 20여개 모니터로 240여개 감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수감자들은 자리에 묶인 채 영상을 통해서만 변호사, 친척, 경찰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출처: BBC]

마피아 관례와 '전통적 가치'에 의존하는 러시아 권위주의

2022년 초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좌파는 러시아의 현실을 "법치주의가 아니라 '마피아 관례'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묘사합니다(포슬레, "'프리고진의 행진'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번역), ≪사회운동포커스≫, 2023.06.28.). 단적으로, 푸틴 집권 이후로는 부정선거 의혹, 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그야말로 '마피아'를 연상시키는 반정부인사·언론인 암살 사건, 체첸 등 '조작'된 테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시위와 반전활동가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지배층 중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기업가들의 의문사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 푸틴 정권이 '비공식 통치'의 도구로서 육성해온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반기를 들어 모스크바 인근까지 진격하고, 여기에 군대와 시민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러한 통치의 불안정성이 폭로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소련 붕괴 이후 전체 수출액의 60~70%를 석유, 천연가스 수출이 차지할 정도로 자원 수출에 매우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거대 국유기업들은 '실로비키'(군대, 비밀경찰 출신 인사)라는 푸틴의 측근 그룹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연고를 지닌 이들이 거대 국유기업과의 수상한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푸틴과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러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장기저성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푸틴 정권은 장기 통치를 위한 기반으로 대러시아 애국주의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종교(러시아 정교)와 '전통적 가치'를 동원하여 여성권·성소수자의 권리 등을 억압해왔습니다. 가족 내에서는 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전통적 통념을 근거로 통과된 2017년 가정폭력 처벌 완화법,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문화적, 가족적 가치와 전통을 보호하고 서구의 반가족 이념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7월 통과된 성전환수술·성별변경 금지 법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푸틴 정권은 또한 무력을 통해 주변국의 권위주의를 지원해왔습니다. 1994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퇴진 위기에 처하자, 푸틴은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을 파견하였으며 경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1월, 토카예프 정권의 요청으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무력 진압에도 러시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부활절 의식에서 만난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주교(왼쪽)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정교회 신자는 러시아 인구 약 1억 4천만 명 중 1억 명에 달한다. 키릴 총대주교는 푸틴 대통령이 2022년 9월 '부분동원령'을 발동한 뒤로 예배에서 신자들의 참전을 촉구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죽으면 모든 죄가 씻긴다" 등의 설교를 하여 세계 종교인들의 비판을 받았다. [사진출처: ≪AP≫]

따라서 우크라이나 민중은 러시아의 권위주의와 인권 탄압이 우크라이나 사회에도 강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노동조합·페미니스트·유태인·성소수자와 같이, 억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항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에 맞서는 세계 민중의 저항에 함께 합시다

'반서방 다극화 연대'에 함께 하자는 NL 주류의 주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권위주의 정권을 그 나라 민중과 동일시하며 이 정권들과 연대하자는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는 자국 정

2022년 5월 2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전선으로 떠나는 날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안토니나 로마노바가 유니폼에 달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유니콘 휘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출처: ≪로이터≫]

권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이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소위 '반서방 연대' 권위주의 정권들을 '반(서방)제국주의'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반서방 국가'의 권위주의·팽창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민중과 연대할 것이냐입니다.

"봉쇄 대신 자유"를 요구한 중국 '백지시위'

2022년 11월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라 건물 입구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생긴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3년 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 전인 10월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데 대한 불만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이로써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에 일명 '백지(白紙)시위'의 물결이 중국 전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위에는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빠져든 뒤, 중국공산당은 초강경 봉쇄 정책과 빠른 '코로나 종식' 선언을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내세워 왔습니다.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중국식 현대화' 또한 "현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가 아니

다”(2022년 11월 3일)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보여주듯, 경제·정치·문화에 있어 ‘중국 모델’은 서구식 체제와 다르며 더 우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회 바로 한 달 뒤 “봉쇄 대신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백지시위가 터져 나온 현실은, 중국 민중이 그러한 ‘중국 모델’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기에 저항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 요구하는 러시아 반전운동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 이래로, 페미니즘 운동, 노동운동, 소수민족 해방 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러시

2022년 11월 30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재한 중국인 백지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우루무치 화재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의 ‘우루무치중로’ 현수막과 백지, “백지혁명 중국”, “자유중국”, “시진핑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사회진보연대]

아 사회운동은 푸틴 정권이 밝힌 개전 근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러시아군 즉각 철수”, “징병 중단”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민중에 대한 연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반전활동가들은 “전쟁이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연방에서 반전 활동을 벌이다 연행된 사람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러시아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부족했기에 푸틴의 야욕이 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다시 러시아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 시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따

푸틴 대통령의 ‘부분동원령’ 선포 사흘 뒤인 2022년 9월 24일,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재한 러시아인들의 <동원 반대! 전쟁 반대!> 시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나는 우크라이나와 연대한다”, “푸틴의 테러를 멈추자”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재한 러시아인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라서 러시아 사회의 민주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는 떨어질 수 없는 요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이라는 구호가 이를 상징합니다. 러시아의 제2노총인 러시아노동총연합(KTR)도 침공 다음 날인 2022년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노동자민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침통함을 느낀다"며 "군사행동은 가능한 가장 신속하게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삶, 자유"를 외치는 이란 민중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함께 '반서방연대'를 형성하는 주요 국가인 이란에서도 2022년~2023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동맹휴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간 22세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가 "여성, 삶, 자유"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9년 수립된 이란 이슬람혁명 체제와 신정일치 권위주의 통치, 여성억압, 경제실패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주한 시위'라며 초강경 진압을 선포하고, 반정부 시위자들을 '신에 대한 반란' 혐의로 사형을 집행하며 심지어 공개 교수형에 처하고 그 사진을 배포하는 등 극도의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히잡

과 순결법'을 통과시켰고, 10월 29일에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폭행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16세 아르미타 가라완드가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운동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 이에 맞서 투쟁하는 각국 민중과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국제연대를 만드는 것이 진보적 사회운동의 기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확대에 둘러싸인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적합한 실천입니다. ●

2022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이란 내 반정부시위에 연대하며 시위에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재한 이란인 시위. "이란 여성들과 함께 일어나자", "히잡 착용 강요 반대, 이슬람 정권 반대", "이슬람 정권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소책자를 마치며

북한의 주장을 비판하며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만들 때

'탈냉전' 30년 시대가 끝났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로써 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확고해졌습니다.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세계 곳곳에 개입했습니다. 냉전에서 승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영원할 것이라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세계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을 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이 익숙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세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경종을 울린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했고, 2012년 말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2016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그해 말 '이단

아' 트럼프가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냉전의 종식 또한 여러 해에 걸친 과정이었고 많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지만, 소련의 해체는 누구나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더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탈냉전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고 대응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운동도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야만은 노동자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가 변화한다는 것은, 어제까지 상식이었던 것들도 앞으로는 있는 힘껏 노력해야만 겨우 지킬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무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점령지역을 병합하여 구시대적 '영토확장전쟁'을 부활시키고,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UN 안보리 차원의 비판과 제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은 이미 현실이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나 NPT 체제 바깥에서 핵과 핵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인류 모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공동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듯 NL 주류는 이러한 변화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증거고, 그

몰락을 앞당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최대한 많이 병합하고,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고,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니제르 등의 사례처럼 세계 각지에 (비록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 '논란'은 있더라도) '반서방'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군부 정권이 더 많아지면 노동자민중에게 더 평등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이런 정세인식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자칭 '진보세력'이 우크라이나, 미얀마, 홍콩, 대만 등지의 민중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주체가 아니라 그저 '서방의 앞잡이'나 '다극체제' 반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NL 주류의 정세인식과 정반대로, 국제정세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노동자민중이 가장 고통 받을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은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고통을 준다는, 상식에 기초한 주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핵무장이 제지받지 않고 이뤄지는 세계가 현실이 된다면 곳곳에서 폭력 행사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하면,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빼앗고도 정권이 유지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 나라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대만 침공에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코앞에서 "중국과 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는 2300만 대만 시민이 무력 점령을 당한

다는 말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가 중국이 침공을 감행하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잠정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이고, 남한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전술핵무기가 우리 지척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웃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삶이 과연 지금과 같거나 심지어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세일까요? 반대로 극우 세력의 선동, 호전적인 군비증강론, 심지어 남한 핵무장론이 힘을 얻기 더욱 좋은 판이 아닐까요? 우리 이웃들이 더 큰 '꿈'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 가서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규칙이 무너지고 힘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실리만 어떻게든 야무지게 챙길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은 우리의 위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는 식의 논리를 한반도에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선제핵공격을 가해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본문에서 강조했다시피, 북한은 핵무력법령을 통해 이런 행위를 합법화했습니다), 70년간 유지된 한미군사동맹이 결국 '근본적 원인'이며, 이것이 한미일군사동맹으로 확장되는 최근 흐름이 북한을 더욱 위협했으므로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북한은 오랫동안 완고한 반서방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다극체제 주도 세력'입니다. 반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남한의 패배는 미국 패권의 몰락과 '다극체제' 세계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며, '비평화적 방도

에 의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한미일군사동맹 해체"가 가장 중요한 구호가 될 것이며, 각국 진보세력의 임무는 자국 정부가 남한을 지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과연 누가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실상 NL 주류의 입장은 결국 북한의 통일정책, 한반도정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남한 사회 내에서 충실하게 따른 것이 곧 주류 NL 운동이었고, 이런 활동을 받아들이지 못한 개인이나 그룹은 떨어져 나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통일정책은 갈수록 실질적 내용이 없어졌고, 그에 따라 NL 변혁론에 입각한 남한의 통일운동이 수행해야 할 역할도 더욱 더 원칙 없는 것이 되었다는 데 주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수사적 차원에서라도 '남한의 변혁'이라는 전망을 제시할 때는 그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했지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할 수 있는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임무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당 사태 이후 NL 당권파만 남은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강령 삭제와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거친 통합진보당 창당, 그리고 민주당과의 '야권연대'가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2019년부터 북한 당국은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두고 "비평화적 방도의 통일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옹호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민플러스》, 2021.02.01.).

결국, 북한 당국과 이를 추종하는 NL 주류의 운동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와 남한을 겨누는 전술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민통'(자주민주통일) 세력이라고 소개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태도에서 자주도, 민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의 길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핵 개발 노선을 고수하며 4대 세습 의지를 드러내는 북한과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가능하다고 여기지도 않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발간된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2'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평화적 분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8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개한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통일이 '전혀'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29.8%(20대는 41.3%)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소 30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란 응답들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운동이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역전하고 통일을 바라는 여론을 확대할 리는 만무하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만듭시다

만약 NL 주류의 정세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천에 있어서도 이와 구별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과 구별되는 실천은 찾기가 지극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이러한 한반도·국제정세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 거리를 두더라도, 실천적으로는 대부분의 운동세력이 이들과 구별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이들과 명시적인 논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남북교류' 사업, '북한 바로 알기' 사업, 통일선봉대 등이 상징하는 NL 주류의 통일사업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반전평화사업을 독점해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조차 부정하는 이런 '통일운동'으로 오늘날 반전평화운동을 대표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몰정세적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전평화 관련 사업을 NL 주류 그룹들이 독점하고 이를 다른 정파들이 묵과하는 것이 시나브로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12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이름을 달고서,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는 한반도 핵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통일교과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화두에 오른 민주노총의 향후 정치세력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대통합 정당이든 선거연합정당이든 간에,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유권자들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합의된 입장이 없다'거나 참여한 세력 각각에게 물어보라고 할 것입니까? 반핵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이 포함된 당을 어떻게 '진

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당면한 총선 대응을 넘어,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 권력세습과 인권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반도 정세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사회운동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국제정세 대응도 이와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운동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해야 하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므로 아무 말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이야기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행보와 군사 위협을 묵과하면, 그것이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로 나아갑시다

'반서방 연대'는 일부 NL 그룹들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정부는 연대를 과시하며 경제·군사 협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의 투쟁과 연대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침략국인 러시아와 피침략국인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이 연대하여 푸틴 정권에 맞서고 있고, 중국 '백지시위' 속에서는 대만, 홍콩, 우크라이나, 이란 민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 사회운동의 실천이란,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탄압에 반대하며,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길이 우리 자신과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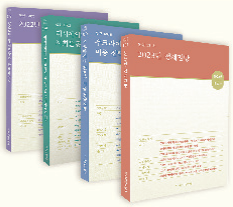
사회진보연대는?

자본주의 너머 대안세계로

깊어지는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고, 연대임금·연대고용을 매개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적 차이에 기반을 둔 여성의 권리 실현과 한반도·동아시아의 비핵평화를 지향합니다.

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혁신하자

IMF위기 직후인 1998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적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창립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동의 사상과 이념을 혁신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발간

3, 6, 9, 12월에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사회운동의 입장과 과제, 정책 및 교육 자료를 싣습니다.

웹진 《사회운동포커스》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정세, 운동 전략, 국제 이슈, 투쟁현장 소식을 전달합니다.

▶ QR 코드 스캔으로 텔레그램 채널 구독!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cialmovementfocus
텔레그램 | t.me/socialmovementfocus

사회운동 혁신을 위한 한걸음,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해주세요.

https://www.pssp.org/support/

▶ QR 코드 스캔으로
사회진보연대 후원!

사회진보연대 후원회원은?

우편으로《계간 사회진보연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세와 운동의 방향에 관한 교육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서, 영화, 등산 등의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전화 02-778-4001~2 | 팩스 02-778-4006
주소 [0398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메일 pssp4001@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pssp.org
페이스북·유튜브 '사회진보연대'를 검색하세요
후원계좌 기업은행 057-034981-04-017 (예금주: 사회진보연대)

Q1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위협 때문인가요?

Q2 북한 체제 자체에는 진보적인 면도 있지 않나요?

Q3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인가요?

Q4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일까요?

Q5 미국이 신냉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Q6 대만 위기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일까요?

Q7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극체제가 국제질서의 대안일까요?